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1996～1997

1996. 12. 30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은 1996년에도 김정일은 당총비서 또는 주석직에 공식 취임하지 않았으나, 군최고사령관 직책으로 실질적 통치를 계속하였다. 북한경제는 식량난 및 에너지난,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실적 부진, 대외무역 감소 등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탈피할 수 없었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북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남한 당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 무실화 전략의 일환으로 무장군인을 판문점에 투입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잠투함 침투사건을 야기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주변 4국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국면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 주변 4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북한체제의 개혁유도보다는 남북한간 균형자로서의 역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1996년의 통일환경, 북한정세, 남북한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1997년의 정세변화를 전망하였다. 본 보고서가

통일문제 관련기관과 각계전문가들을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12월 30일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丁世鉉

要 約

1. 統一環境

가. 東北亞情勢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 전개된 중국의 군사훈련은 동북아 지역을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만사태는 미·일간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자극요인이 되어 미국과 일본은 1996년 4월 신안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일 「新安保共同宣言」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有事時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1세기를 향한 戰略的 同伴者關係와 상호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으로써 미·일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에 묵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양국 모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 양국의 군사협력은 제한적 성격을 지닌다.

1996년도 상반기 동북아 정세는 미·일 對 중·러 대립으로 가시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였으나 下半年에 들어 중국과 미·일간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완화 기미를 보이

고 있다. 클린턴 美대통령은 재선 이후 미·중 갈등관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과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새로 출범하는 클린턴 2기 행정부는 대외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동맹을 축으로 하여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包容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15차 당대회 개최와 홍콩주권 회수 등 대내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대만문제와 인권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중관계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엔 차관 확대 등 경제협력 증진과 頂上會談 등 정치적 접촉 확대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증대되고 있는 민족주의 성향과 일본에서 강화되고 있는 우익보수 성향을 고려할 때 상호 견제적인 외교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미·러관계는 대화와 협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도, 러시아의 實利外交 추세가 강화되어 선별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러 양국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실익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러관계는 국경선 부근의 경비병력 감축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는 등 안보협력이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1997년 동북아 정세는 역내 국가들의 양자관계 개선 추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난 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정세 안정 추세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일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1996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한·미 양국은 4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중국간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공동 제의하였다. 그 후 북한 잠투함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측이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한국·미국과 함께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며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獨島문제를 두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한편, 일본은 대북 경수로 건설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미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으로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중 정상 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은 「4자회담」이 성사되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接境 強大國으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는 수 차례에 걸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참여의사의 표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분야와 경제분야에서 1996년 한·러 양국관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았다.

1997년 새롭게 출범하는 클린턴 2기 행정부는 북한체제의 軟着陸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4자회담」 수락, 미사일회담 및 미군유해발굴 재개 등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쌀제공 등 대북지원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의 속도와 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는 부분적으로 견해차가 표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미간 대북공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북 연착륙정책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다.

일본은 대북정책에 관해 기본적으로 한·미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

장 및 過去清算問題 등으로 한·일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15차 黨대회 등 국내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주변정세의 안정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간 정치·외교적 협력관계는 양국간 외교정책협의회와 외무차관급 안보대화를 통하여 보다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러시아가 남북한 등거리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 측면에서 한·러 협력관계는 담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러간에는 防産物資 도입 등을 통한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경제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 北韓情勢

가. 對內情勢

1) 權力承繼 및 理念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은 금년에도 김정일은 공식취임을 하지 않았으나, 군최고사령관 직책으로 실질적 통치를 계속하였다. 북

한은 새로운 이념적 혹은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대신에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하는 작업과 함께 그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특히 '붉은기 철학'을 새로이 제기함으로써 김정일의 사상가적 면모를 내세우고, 김일성과의 제한적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7년 북한은 김정일 최고지위 취임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김정일의 사상가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군우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지지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최고지위 취임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 확보에 대한 자신감 여부는 물론, 경제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고려하여 그의 등장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2) 經濟動向

1996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은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금년은 제3차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라 설정하였던 완충기의 종료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완충기 정책의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 이는 완충기의 주요 과제였던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97년 북한경제는 금년 수준 이하로 쇠퇴할 것이며, 비공식 부

문 경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은 정치적 불안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일종의 생존수단으로서 비공식 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할 것이나, 제도적인 경제체제 개혁 조치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社會動向 및 人權實態

김일성사망 2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선전선동과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였다. 북한인권문제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남한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1997년에도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암시장 등 사적 부문이 활성화되는 한편, 이의 방지를 위한 각종 통제기구의 증설·강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재 및 식량의 사적 거래, 주민들의 개인이익추구, 뇌물수수 등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난이 완화되지 않는 한 사상교양을 통한 대주민 설득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사회통합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軍事動向

1996년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비해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 국방규모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으나, 전력증강투자비 누계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한·미 연례군사 평가회의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하에서도 군사력 증강 우선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실질적인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그들의 공세전력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기습공격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1997년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정통성과 강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공격력 강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투쟁분위기를 고취할 것이다.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대내문제가 심화될수록 김정일 정권은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충돌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조성하려 들 것이며, 대남기습침투역량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나. 主要 對外動向

1) 北·美關係

1996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개설, 미군유해송환, 미사일개발 및 수출통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국관계를 진일보시켰다.

북·미관계의 진전은 양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을 구축하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1997년 북한과 미국은 핵동결, 대북중유제공, 경수로건설사업 등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군유해발굴, 미사일 개발 및 수출통제, 생화학무기 감축 등 북·미간 현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4자회담」의 틀속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개설, 대북식량지원 및 제2단계 대북경제제재완화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적 교류 및 대화의 폭을 넓혀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北·中關係

1996년 북한과 중국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견해차가 노정되었으나, 동북아 신질서 재편과정에서 상호 상대방과 전략적 유대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북한과 우호관계 유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대미관계 개선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 북한의 경제위기 및 중국내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1997년에도 북·중간에는 전략적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 유지와 혼란방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한중수교 5주년을 계기로 한·중간 정치·안보협력 확대와 15차 당대회시의 중국지도부 세대교체는 북·중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北·日關係

1996년 북·일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부진하였다. 경제관계에서만 예년 수준을 유지했을 뿐 정치적 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對日비난이 거듭된 가운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1997년에도 수교회담 재개 여부는 북·일관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대화의 재개 및 「4자회담」의 성사와 연계되어 있다. 1997년에도 일본이 한·미·일 공조라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4자회담」이나 남북대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北·러關係

1996년 북·러관계는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복원이 가장 큰 진전이였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양국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1997년 북·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호방위조약 문제, 러시아의 KEDO참여 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문제, 「4자회담」 문제, 러시아내 벌목공 문제 및 마약밀매 문제 등이다. 러시아는 KEDO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1.8), 북한이 경제난 타결

을 위해 마약밀매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11.13). 북·러간 경제협력문제는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정책으로 인해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對南動向

1996년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당국·비당국 분리의 대남 강경태도와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였고, 정·경 분리의 적대·유화적 태도를 병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공산화 통일기반 조성차원에서 通美封南의 남한배제적 대미접근정책과 더불어 대남 선전·선동 및 무력침투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당국간 대화와 관련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대남 경제문제와 관련, 북한은 당국간 대화거부와는 달리 민간 경제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당국간 대화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대남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남 긴장고조 전략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3. 南北韓 關係

가. 南北對話

북한은 1996년에도 한국배제·대미관계우선 및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의 중간조치로서 “북·미공동군사기구”를 제안하는 한편,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도발 행위를 취하였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는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4자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위해 “3자공동설명회”를 북한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同 설명회를 거부하는 한편, 「4자회담」에 대하여는 확실한 의사표명 없이 가부간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한반도 냉전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해 남북대화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던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남북경협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합의 이행구도와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의 중요성을 마닐라회담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한국이 수용할 만한 사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7년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면 잠수함사건은 북한이 우리측 요구의 상당부분을 수용하여 사과하고 3자공동설명회 참가를 약속하는 한편, 경수로사업 재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 등이 보장되는 포괄적 이행구도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도 일단 국면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3자공동설명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이 성사되거나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대내결속을 위한 남북긴장의 필요성, 외교적 열세만회를 위한 대미관계 진전의 필요성,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의 요인으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계속 견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輕水爐事業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과 사용후 연료봉의 봉인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996년 경수로사업은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첫째, 주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KEDO는 한전을 일괄도급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로 공식 선정하였다. 둘째, 경수로건설 예정부지인 함남 신포지역에 대한 제3, 4, 5, 6차 부지조사가 한국측 기술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셋째, 후속의정서와 관련하여 KEDO와 북한은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 등 3개의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에는 잠수함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사용후 연료봉의 봉인 작업이 재개되는 한편, 후속의정서의 조인 및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도 실시되어, 1997년도 상반기 중 부지정리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EU의 KEDO 집행이사국 참여 및 중유비용 분담 등으로 인해 대북 경수로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수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KEDO와 한전간 상업계약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한편 경수로사업의 비용산정 및 분담, 경수로사업의 하청 등을 둘러싸고 한·미·일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다. 交流·協力分野

1996년도 남북교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침체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의 우리측 불참, 잠수함사건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냉각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제침체에 따른 상품수출능력의 저하가 그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반입품목은 철강금속류 및 위탁가공물품인 섬유류이었으며, 반출에서는 위탁가공을 위한 섬유류 원·부자재가 주요 품목을 이루었다. 올해 남북간 물자교류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점과, (주)대우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 내에 민족산업총회사(합영)를 설립하여 생산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침체양상을 보였던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1997년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산 대남한 반출물품의 품목 및 수량부족과 경화부족으로 인한 북한의 남한산 물품 반입능력 제약으로 남북교역량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이 노동력을 통한 외화획득 및 경공업 발전기회 확보를 위해 위탁가공을 선호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도 저임금 활용 및 대북투자 대비차원에서 위탁가공에 적극적임을 감안할 때, 상호실리에 바탕을 둔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투자의 규모 및 범위가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대북투자 논의를 위한 기업인 방북이 확대되고 남포공단 및 나진-선봉지역에서의 시범적 경협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남북한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하는 다자간 교류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술분야에서는 통일문제, 경제, 환경, 언어,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남북한 학자 또는 전문가들간에 접촉이 있었다. 종교분야에서는 남북종교인회의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금년에는 전년과 같은 종교인의 방북 사례는 없었다. 한편 체육분야에서는, 애틀란타 하계올림픽 등을 통해 남북간 경기가 있었다.

제3국에서의 교류는 남북당국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에 유효한 교류통로가 되고 있다. 1997년에도 제3국에서의 교류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일문제 및 언어·문화분야에서 남북한 학자와 제3국 학자가 공동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가 증대할 것이다.

라. 人道主義的 事案

1996년에도 남북간의 제도화된 공식통로를 통한 이산가족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 이산가족은 국내 이산가족연락센터나 해외 이산가족상봉 주선단체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교환을 시도하였다. 안승운목사의 남북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이 북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북한은 안목사의 자진 입북을 주장하며 송환을 거부했다. 또한 북한은 또한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측의 송환 및 해명 요구를 거부했으며, 자체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내 출소 공산주의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996년에도 대북 수재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조난 북한 선원을 구조·송환하였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분야별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백서 1996」을 발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1997년에도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주민접촉으로 인한 개방분위기 확산과 북한체제의 취약성 노출을 우려하여 이들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을 통한 상봉 등은 김경호 일가 17명의 탈북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춘궁기 북한식량난이 심화될 경우 한국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다.

마.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 關係

1996년 남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실무그룹회의와 제1, 2차 협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무국소재지, 중기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주선으로 동북아 항공실무자회의를 열어 자국영공의 무차별 개방원칙과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조치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남북한

은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군비통제 흐름에 제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관계의 경색으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및 항공협상의 후속회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북한만이 반대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1997년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금년의 긴장과 대립을 어느 정도 벗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실무회의, 항공관제협상 등 실리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무자급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 目 次 -

I. 統一環境	1
1. 東北亞情勢	1
가. 東北亞 安保環境	1
나. 東北亞 4國의 相互關係	8
2.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26
가. 韓·美關係	26
나. 韓·日關係	29
다. 韓·中關係	32
라. 韓·러關係	35
II. 北韓情勢	38
1. 對內情勢	38
가. 權力承繼 및 理念	38
나. 經濟動向	41
다. 社會動向 및 人權實態	48
라. 軍事動向	52
2. 主要 對外動向	55
가. 北·美關係	55
나. 北·中關係	59
다. 北·日關係	63
라. 北·러關係	67
3. 對南動向	70

Ⅲ. 南北韓 關係	75
1. 南北對話	75
2. 輕水爐事業	81
3. 交流·協力分野	87
가. 經濟分野 交流·協力	89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93
4. 人道主義的 事案	95
5.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 關係	100
 # 부록: 1996년도 主要事件日誌	 107

- 表 目次 -

<표 2-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42
<표 2-2> 북한의 대외무역	44
<표 3-1> 경수로 부지조사 현황	84
<표 3-2> 1996년 분야별 접촉 성사현황(1.1~10.31)	88
<표 3-3> 남북교역 승인현황(1988.10~1996.11)	90
<표 3-4> 남북교역 통관현황(1988.10~1996.10)	90
<표 3-5> 1996년 이산가족 접촉 성사현황(1.1~10.31)	96

I. 統一環境

1. 東北亞情勢

가. 東北亞 安保環境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된 반면, 중국과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勢力版圖가 변화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관계도 협력과 갈등을 겪으며 재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는 지역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상호 불신으로 협력과 대립이 병행하는 二重構造를 보이고 있다.

(1) 東北亞 軍事·安保 情勢의 特徵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10만 병력을 유지하며 지역 안정을 위한 均衡者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나 동북아 질서를 독자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協力を 통하여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경

제적 이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極東軍 56만 병력을 유지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내의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구소련시대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복원 등을 통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러시아 정부는 재정상태 악화로 해외 무기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역내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新防衛計劃大綱」을 확정('95.11)하여 24만 자위대 병력의 군사전략 범위를 '專守防衛'에서 '地域防衛'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1996년도 방위예산을 1995년도보다 2.58% 늘어난 4조 8,455억엔으로 책정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자국의 군사역할 증대가 미국의 상대적인 안보역할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290만명의 총병력을 유지하며 군현대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상군보다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邊境防禦 중심의 소극적 입장에서 近海防禦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89년 이래 매년 10%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여 왔으며 1996년에는 11% 증액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주변국가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대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최신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필리핀·베트남·한국 등 인접국가들도 군비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노동 1호 및 노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용화 단계에 있다. 이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역내 국가들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2) 新美·日安保體制 成立背景 및 效果

역내 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1996년도 동북아 안보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다.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 직전 대만해협에서 전개된 중국의 군사훈련은 중·대만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만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일관계에 영향

을 줄 수 있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海路安全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만사태는 미·일간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자극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마찰 등을 통해 증대된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양자관계의 복원을 위해 신안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4.17)하였다. 「新安保共同宣言」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有事時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동맹을 선언한 것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안보공동선언」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 욕구를 억제하고, 이완된 미·일 양국간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중국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4.25)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戰略的 同伴者關係와 상호 신뢰 및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의 라이선스생산, 잠수함 및 신형공격기 슈퍼7의 공동 개발·검토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으로써 미·일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

제에 묵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양국 공히 미국과 적대적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바, 양국의 군사협력은 제한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과도한 접근이 서방으로부터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중국 또한 국내경제 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자극하면서까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996년도 상반기 동북아 정세는 미·일 對 중·러 대립으로 가시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였으나, 下半期에 들어 중국과 미·일간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완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美대통령은 재선 이후 미·중 갈등관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11.24)에서 표출되었다. 일·중관계 또한 양국 지도부의 빈번한 접촉과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하반기에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3) 多者間 安保協力 推進 現況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적 번영과 함께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資源貧國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미국·일본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의 시장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는 역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불신과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줄 만큼 강력한 地域統 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심어줌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多極化, 군비경쟁의 증대, 역내 국가간 경제의존도 심화 등 탈냉전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일·중·러와 한국의 민간인 학자 및 정부관료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1993년부터 매년 「동북아 협력대화」(NEACD)를 개최해 오고 있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을 포함한 역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인 「동북아 안보대화」의 창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자간 안보대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취하고 있고 미·일·중·러 4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다자간 안보회담이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 강화 추세로 인하여 일본 北方 4個島嶼 반환문제, 중·러간 변경문제, 釣魚臺列島 영유권문제 및 한·중·일간 어업문제 등 영토 및 국경문제가 동북아 질서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요인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바, 다자간 안보대화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4) 1997년 東北亞 安保情勢 展望

1997년 새로 출범하는 클린턴 2기 행정부는 국내정치보다 외교 문제에 비중을 두고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동맹을 축으로 하여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包容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미국과의 갈등관계 해소를 원하고 있는 바, 미·중관계는 금년보다 더 원만하게 진척될 것이다. 그러나 1997년에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는 여전히 갈등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1997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구권 확대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보수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여전히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일본의 對중·러관계는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진전에 병행하여 점차 개선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증대되고 있는 민족주의 성향과 일본에서 강화되고 있는 우익보수 성향을 고려할 때 상호 견제적인 외교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1997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4국간의 화해분위기의 확대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체의(4.16)한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회담」 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일·중·러의 對한반도정책 또한 國益優先의 이중성을 깔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주변 4국간의 협력증대는 일반적으로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기여하겠지만,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나. 東北亞 4國의 相互關係

(1) 美·日關係

미국과 일본은 1996년 탈냉전기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국방장관회담(4.15)에

서 「물품·서비스 相互提供協定」(ACSA)을 체결하여 미·일 공동훈련시 무기·탄약을 제외한 연료·식량·물품과 수송·수리·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총 1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4.17)에서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군사력 증강 및 무력시위 그리고 領土紛爭이 빈발하는 등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유사시에 공동 대처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新安保共同宣言」을 채택하였다.

同 선언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47,000명의 주일미군을 포함하여 10만명의 미군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지역 주변 유사시에 대비한 「美·日 防衛協力指針」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일 양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 외무·국방장관회담인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가능범위와 한계에 대해 1997년 가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9.19)하였다.

美·日同盟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던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문제와 관련, 미·일 양국은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2.2)에서 오키나와 기지의 21%에 해당하는 11개 기지와 시설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본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반환하기로 한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대체할 해상헬기 이착륙장을 5~7년내에 오키나와 동부해안에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同

위원회에서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F2)의 공동생산, ACSA 이행, 탄도미사일방위체제의 공동연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분야에서 미·일 양국은 안보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된 「美·日 包括經濟協議」는 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일본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은 1995년까지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한 데 이어, 1996년에는 미·일 각료급 반도체협상(7.28~8.2), 미·일 보험협상(11.15~16) 등을 통해 보험,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시장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개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본과 상당한 마찰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쿄에서 열린 「美·日 規制緩和協商」(11.19)에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는 일본 행정의 관료적 관행 등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개혁 문제를 미·일간 통상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행정개혁 대상 분야와 관련, ①행정절차의 정보공개, ②행정지도의 투명성, ③정부자문기관의 중립성, ④민간기업에 대한 관료의 낙하산 인사억제, ⑤분쟁처리제도를 포함한 6개 분야 22개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행정의 불투명성 시정을 요구하였다.

향후 미·일관계는 양국 정권의 제2기 출범을 계기로 오키나와

기지 축소문제와 경제·통상 마찰문제 및 일본내 규제완화 문제에서 부분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나갈 것이나, 안보면에서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극동지역의 유사시에 일본의 군사적 후방지원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美·日 防衛協力指針」의 개정작업이 1997년 가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및 대만해협 유사시 자위대에 의한 미군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전투인접지역에서의 의료활동 및 수송 지원 등의 문제가 미·일간에 협의되면서 일본 국내에 集團自衛權論爭 및 헌법개정 논의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안보적 역할증대에 대한 논쟁이 미·일 양국 및 아시아 주변국간에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2) 美·中關係

1996년 미·중관계는 양국 외무장관 회담(4.19), 레이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중(7.8~10) 및 吳儀 중국 대외경제무역협작부장의 방미(9.26~27)를 계기로 쌍무간 안보·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무기수출문제, 지적 재산권 협상문제 및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 등으로 첨예한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대만문제는 1979년 국교 정상화이래 미·중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대만에서 최초로 실시된 총통 직접선거(3.23) 과정에서 대만독립 주장이 대두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의 양대 항구인 基隆과 高雄港 부근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은 권력승계의 정치과도기에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족주의·애국주의 분위기 및 군부의 정치 영향력 강화 추세와 맞물려 전개되었다.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중국 지도부내에서는 대미관계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시 미국의 군사개입 촉구 결의안」(3.21)과 「대외관계 수권법안」(3.28)을 통과시켜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대만과의 관계격상 및 대만에 대한 軍事武器 제공 확대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두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함으로써 중·미관계는 군사충돌 직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중국내 인권문제도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3.6)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4.23)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美하원도 「중국인권 결의안」(6.27)을 통과시켜 魏京生과 王丹

등 반체제인사와 티벳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을 비난하고, 「자유 소리 방송」 설립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인권압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은 「미·중인권 비교보고서」(3.29)를 발간,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로서 인권보다도 발전권과 생존권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변하는 한편, 미국이 인권문제를 중국의 안정과 발전을 파괴하고 견제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홍콩주권 반환과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대내 안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을 지속함으로써 미·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은 대외정책에서 업적을 이룸으로써 大選(11.5)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클린턴 美대통령에게 커다란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미국 내 언론기관과 정보기관은 중국이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포하였고, 同 문제는 미·중 양국 지도부간 접촉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안정을 파괴하는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실험 중단 의사(7.29)를 표명하고, 지역안정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국가에 대한 核技術 판매 자제 의사(11.4)를 밝힘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미·중간의 마찰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WTO 가입문제 등 경제·통상 부문에서도 야기되었다. 미국은 1995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338억달러에 달하는 赤字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기인한다는 판단하에 중국정부에게 관세율 인하와 엄격한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캔터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CD 不法複製 등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중 보복조치 단행을 경고(1.31)하고, 3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 부과방침(5.16)을 발표하였다.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인한 미·중간 갈등은 중국이 불법 CD 복제품 공장 폐쇄를 약속(6.17)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지방분권화로 인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문제도 미·중간 갈등을 노정시켰다. 중국은 WTO에 開途國 지위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부분적으로 관세율 인하조치를 취하여 同 기구 가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면서도 선진국 지위로 가입할 것을 주장하고, 보다 성실한 관세율 인하조치와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였다.

클린턴 재선이후 미국은 중국과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對中 包容政策 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1997년 15차 당대회 개최와 홍콩주권 회수 등 대내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인식은 1996년 하반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의 방중(11.19~21), 미·중 정상회담(11.24) 및 遲浩田 중국 국방장관의 방미(12.5~18)로 발전되었으며, 1997년 상반기 고어 美부통령의 중국방문과 같은 해 11월 江澤民 주석의 미국 공식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미국방문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냉각된 양국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국 지도자간 교환방문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상호간 입장차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내 민족주의 추세와 미의회의 反중국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양국간 불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7년에도 미·중간에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나, 지역안정과 경제 문제 등에 있어서는 상호 정치적 타협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3) 美·러關係

1996년도 미·러관계는 정상회담(4.21)과 2차에 걸친 고어·체르노미르진 회담(1.29~30, 7.14~16)개최 등 양국간의 협조가 강조되

면서도, NATO의 동유럽 확대, 전략무기 감축, 보스니아 사태, 쿠바·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비판·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大選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엘친 지원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상에서의 미·러 年例 해군합동군사훈련(8.14~16) 등 군사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특히 NATO 확대 및 전략무기 감축문제 등 안보문제에 있어서 갈등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는 NATO의 동유럽·CIS 확대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요인이라는 인식하에 NATO 확대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군사력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기체결 軍縮條約의 내용상 불평등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약이행을 거부 또는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러 외무장관회담(2.9~10 헬싱키, 3.22~23 모스크바)과 국방장관회담(10.16~18, 모스크바)을 통해 START II 비준(미국은 1.26 상원 비준)을 촉구하였으나, 러시아는 同 문제를 NATO 확대문제와 연계지으면서 START III 협상의 조기개최를 요구하였다.

보스니아사태와 관련, 러시아는 세르비아계가 유엔平和協定 이행 등 경제제재 해제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제재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2.23)한 바 있으며,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주도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쿠바문제와 관련, 미국이 쿠바의 민항기 격추(2.24)에 대한 보복

으로 對쿠바 經濟制裁 강화법을 제정(3.12)하자, 러시아는 同 법이 자국의 이해와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쿠바와의 관계발전을 위해 경제봉쇄조치에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3.13)하였다. 그후 러시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바내 원전건설공사 재개, 통신·정보산업 현대화 지원 등 경제협력 재개 방안에 합의하였다.

중동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중동 평화정착과정의 주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95.12)을 바탕으로 미국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원전건설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라크 석유산업에 진출하는 등 유엔의 對이라크·리비아 제재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9.5)하였다.

따라서 1997년도 미·러관계는 집권 2기를 맞이한 클린턴과 엘친 행정부간의 대화와 협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도, 러시아의 獨自 實利外交 추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종래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희석되고, 국익을 기초로 한 선택적·사안별 협력관계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4) 日·中關係

釣魚臺列島 영유권 문제, 중국의 핵실험 실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및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등으로 인하여 1996년 일·중간에는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양국 지도부의 접촉 및 일본의 對中 엔차관 재개 약속 등 양국간 긴장관계가 다소 완화되었다.

1996년 일·중관계를 긴장시킨 가장 중대한 문제는 釣魚臺列島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일본의 우익단체인 「靑年社」가 조어도에 등대를 설치(7.14)하고, 이에 대해 카지야마(梶山) 관방장관이 “정치단체의 합법적인 행동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7.17)하며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으로 중국내에서 반일감정이 팽배해지고, 중국정부는 등대 철거를 요청(7.17)하는 등 일본에 엄중히 경고하였다. 일본은 對中 無償援助 재개를 약속하고 사태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11.24)하였다.

일·중간 영토주권 문제로 인한 갈등은 200해리 經濟水域 설정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상과정에서도 노정되었다. 일·중은 북경에서 경제수역설정 실무협상을 전개(4.9~10)하였으나, 상호간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하였다. 일본은 漁業協定 개정에 주력하면서 총어획량 규제권을 연안국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

국은 수역확정 문제에 비중을 두면서 어선에 대한 규제권을 어선 소속국에 귀속시키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조어도 영유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은 이를 국제문제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양국의 입장차이로 年内로 예정되었던 제2차 경제수역확정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일본 내각관료가 제2차 세계대전을 美化하는 발언을 하고 하시모토(橋本) 일본 수상이 전후 최초로 수상 신분으로 신사를 참배(7.29)하는 등 過去事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도 일·중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錢其琛 외교부장의 방일시(3.31~4.3)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從軍慰安婦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6.6)하고 10월 예정되었던 李嵐清 부총리의 방일을 취소하였다.

일·중은 상대방의 군사력 증강정책에 대해 견제입장을 보임으로써 양국관계는 경색되었다. 중국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 실시(6.8, 7.29)가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政府借款 제공 협상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핵실험 중단을 발표(7.29)하고 일본이 엔차관 재

개입장을 천명(11.24)함으로써 일·중간 마찰이 점차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양국간 교역규모와 일본의 대중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6년 일·중간 교역규모가 6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대중 엔차관 재개 방침 발표 이후 중국 東北三省 地域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점도 양국간 경제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대중 엔차관을 大氣汚染 대책과 농지개량 등 특정 부문에 한정하고 있는 점은 중국을 불만족스럽게 하고 있다.

1997년 국교정상화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외교가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이 중국에 대해 無償援助와 엔借款을 증대할 것인 바, 일·중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내 민족주의 추세, 양국의 지역질서 주도권 확보 노력, 그리고 대만 이등회 총통의 일본 京都大 방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견제와 대립의 완전 해소는 어려울 것이다.

(5) 日·러關係

1996년 일·러 양국은 정치·경제·군사 등 전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가운데 北方 4島 영유권 교섭재개에 합의하고, 일본이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방영토 개발에 협력자세를 보이는 등 상호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특히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입장 고수와 일본의 미온적인 對러 경협에 대한 상호 불만으로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일본의 옐친 재선 지지와 法과 정의에 입각하여 영토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東京宣言」 재확인(4.18)을 계기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하시모토 日총리가 「核安全 頂上會議」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4.18~20)하고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이케다(池田) 日외상이 5차례 회담(3.19, 모스크바; 6.29, 리용; 7.22, 자카르타; 9.23, 뉴욕; 11.15, 동경)을 갖는 등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긴밀한 양국관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군사적으로는 미·일 안보협력 유지하에 주변국들과의 안보대화·방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신뢰증진을 도모해 나간다는 「新防衛計劃 大綱」('95.11)에 따라 우스이(臼井) 방위청 장관이 戰後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4.27~30)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 국방정책 공표, 고위 국방당국자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구축함을 71년만에 러시아 해군창설 300

주년 기념식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7.26~29)한 바 있고, 체첸바토프 러시아 극동군 사령관도 최초로 방일(5.27)하는 등 일·러 양국간 안보대화 및 방위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부간 무역·경제위원회가 최초로 개최(3.19)된 데 이어 일본 경제기획청과 러시아 경제부가 러시아의 향후 경제전략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5.23)하는 한편, 일·러 재무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10.1)되어 러시아의 파리클럽 가입과 양국 경제인사간 교류 활성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일본의 輸出入銀行 融資 5억달러와 극동 자루비노港 설비확충 조사비용 20만달러 제공 및 극동 장기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합의(3.19)하고 사할린에 시장경제 지원기구인 「일본센터」도 개설(9.5)하는 등 경협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양국간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는 러시아내 민족주의 고조에 따른 강경입장 고수와 일본의 「先 영토문제 해결, 後 경협」 입장 견지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이 「동경선언」을 재확인한 데 이어 양국 외무장관이 사실상 영토 교섭 회의인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급 회의」 개최에 합의(7.22)함에 따라 영토교섭이 13개월만에 재개되었다. 동경에서 개최된 同 실무회의(10.2~3)에서는 일본이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시한설정을 요구한 반면, 러시아는 양국간 관계진전에 맞춰 시간을 갖고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양국 대

표들은 쿠릴열도 공동개발과 쿠릴 남부도서-일본간 無비자 방문, 쿠릴 남부수역에서의 漁撈協力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영토교섭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을 방문(11.15)한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케다 日 외상과의 제7차 외무장관 정기회담에서 북방 4도 문제와 관련, 양국이 공동으로 4개 섬을 개발하는 「공동경제활동」 구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케다 외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러 양국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강경자세가 실익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으로서는 「동경선언」 당사자인 옐친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동경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영토문제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도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改革政策의 지속적인 추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 획득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문제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주요현안에 대한 조속한 정책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일본도 총선후 자민당 소수 單獨政權의 구성으로 국내정세가 유동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일·러 양국 국내정세의 조기 안정화 여부가 영토협상은 물론 협력관계 진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6) 中·러關係

1996년 중·러 양국은 세계 및 지역안보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강택민 국가주석과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북경 정상회담(4.25)에서 양국관계를 “21세기를 대비해 평등, 상호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戰略的 同伴者關係로 발전시킬 것”임을 표방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국경선 주둔병력 감축협상을 통해 양국간 信賴構築이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실현되었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간에 형성되었다. 중국은 미·일 양국이 「신안보공동선언」(4.17)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자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지목한 데 대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확대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은 미국 주도하에 있는 NATO의 확대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양국관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러시아 군사무기 도입확대를 통해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부터 러시아로부터 SU-27 전투기 26대, 디젤잠수함 1척,

미사일 防空시스템(S300) 4기 등을 매입한 바 있는 중국은 금년에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잠수함, 미사일 防水시스템 및 신형공격기 슈퍼7 등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중국이 SU-27 전투기 24대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중국에게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중국은 12월 초 55억 달러 상당의 SU-27 전투기 55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중국의 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러간 경제협력은 교역 및 합작 투자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진되었다. 1995년 양국간 60억 달러 규모의 교역액이 금년에는 전년대비 148%(10월 말 추계) 확대되었다. 또한 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시베리아 석유·가스관 건설과 20억 달러 규모의 遼寧省 원자력발전소 건설 합작사업이 체결되었으며, 중국의 三峽 댐 건설사업에 러시아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1997년 4월로 예정된 중·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국경선 부근의 경비병력 감축에 관한 협정이 조인될 것으로 보여 양국간 安保協力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간 경제협력도 더욱 확대되어 20세기 말까지 양국 교역은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가. 韓·美關係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食糧難 등 대북정세 인식 및 대북협상의 구체적 사안들에 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양국은 빈번한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가고 있다.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1.24~25)에서 미국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한계에 도달하면 급격히 붕괴되거나 對南 軍事挑發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식량부족량에 대해 공신력있는 조사가 선행되고,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방법이 확보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대북 지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을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연계문제 및 미·북관계 개선 범위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명백히 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4.16)하고 ①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문제는 분

리하여, ②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며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③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原則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중국간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공동 제의하였다.

한·미·일 3국은 제2차 고위정책협의회(5.13~14)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를 다지고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9.18)하자 미국은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개최(10.31)된 제18차 한·미 軍事委員會會議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능력을 보장하는 한편, 대잠수함 연합 훈련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11.1)에서 양국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도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태도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추구는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미·북간 개별협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한국은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대북 경수로 支援事業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잠수함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미 頂上은 회담(11.24)을 갖고 제네바 합의가 계속 이행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4자회담」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이 잠수함사건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앞으로 유사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이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異見을 보였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한·미간 통상마찰이 지속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4.1)한 「9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을 무역장벽이 심한 주요 국가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知的財産權, 통관검역제도, 표준 문제 등을 비판하였다. 그후 미국은 한국측이 통신, 건설, 자동차,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확대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통신분야에서 한국을 優先協商對象國으로 지정하고 통신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새롭게 출범하는 클린턴 2기 행정부는 북한체제의 軟着陸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

된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서 대북 쌀지원 재개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대북정책의 속도와 범위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이가 확대될 우려가 있지만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입장차이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의 戰力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신, 자동차,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진출 등을 명분삼아 시장개방 이외에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촉구하는 각종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韓·日關係

1996년 한·일 양국은 수 차례의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였으나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평행선을 유지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3.2)을 가졌으며, 이어 제주도 정상회담(6.22~23), 제4차 APEC 정상회의(11.24)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결정(5.31)에 대해 성공적 후원을 약속하였고, 또한 북한 核問題, 「4자회담」 및 잠수함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오쿠노(奥野) 前법무상은 “군대 慰安婦는 商行爲”(6.7), “종군 위안소는 업자들이 운영한 것”(6.29)이라는 妄言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일본정부는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낼 謝罪書翰에 ‘도의적 책임’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명시(7.26)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기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에서 1인당 2백만 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 자민당의 「외교조사회」는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11.28)에서 독도 영유권 관철을 외교정책 지침으로 내세웠다. 「외교조사회」는 同 지침에서 독도는 “틀림없이 일본의 영토이며 오랫동안 한국이 (독도에 대한) 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제, 2백해리 排他的 經濟水域(EEZ) 설정시 독도가 한국수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유종하 외무부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입장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확실하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제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발표(11.18)하였다. 유종하 장관은 또한 “유엔 훈령 6백79호에 ‘일본영토는 본토와 인접도서로 규정한다. 단지 제주도과 울릉도 독

도는 제외한다’는 것이 명기돼 있고, 1877년 일본 문서에는 ‘송도(울릉도)와 죽도(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선언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군사협력과 관련, 한·일 양국은 국방장관 및 방위실무자 교류를 통해 防衛協力을 확대해 오고 있는 바, 1994년 한국해군 연습함대가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금년에는 일본 海上自衛隊 연습함대가 부산을 방문(9.3)하였다.

對北 경수로 건설사업비 분담과 관련, 일본은 부대설비와 도로 건설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경수로 건설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미 양측에 통보(8.20)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은 경수로비용의 20% 수준인 1천억엔(약 10억 달러)정도만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에는 한·일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 일본 총선(10.20) 결과를 고려할 때 한·일관계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 기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過去事 문제로 한·일관계가 불편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韓·中關係

1996년 한·중 양국은 수교 4년째를 맞아 경제·사회·문화 교류부
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면에서도 교류·협력을 한층 확대함
으로써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경제면에서는
양국간 다소간의 마찰도 발생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 정치·안보협력 확대에
신중을 기해 왔으나, 1996년에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
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북한의 판문점 武力示威로 한반
도의 긴장국면이 고조되었을 당시 중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
결시까지 기존의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4.11)으로써 북한의 군사행동을 간접 비난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으로 제안한 「4者會談」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
중 정상회담(11.24)과 외무장관회담(7.25, 11.23)에서 중국은 「4자
회담」이 성사되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재
확인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安保理에서 중국 대표가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안보리 의장

聲明이 채택(10.15)될 수 있었다. 중국은 경제난과 대외고립에 처한 북한이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한·중은 군사부문에서도 교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닐라 한·중 정상회담에서 江澤民 주석이 군사교류 추진을 약속한 후, 羅斌 중국 국방부 외사국장이 대표단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12.7~14)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간 군사교류 정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험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중간 경제·통상교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형항공기 합작사업 결렬과 어업실무협상 부진 등 경제부문에서 마찰이 야기되기도 했다. 1996년 한·중간 교역규모가 200억달러를 초과하여 한국은 중국의 4대 交易國 지위,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연간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를 구실로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김영삼 대통령 방중시('94.3) 양국이 합의한 중형항공기 합작생산문제가 중국측의 합의 불이행으로 결렬되었다. 중국이 합작지분율과 최종 조립공장 건립문제에서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합의가 파기되었으며, 중국은 합작선을 유럽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한·중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실시에 따른 漁業協定

체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담을 개최(5.3~4, 8.26~27)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중은 경제수역 확정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서해상 不法 조업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1997년 중국은 15차 黨대회 등 대내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주변 정세의 안정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중·미관계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중간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는 보다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4월과 8월 양국간 외교정책협의회와 외무차관급 안보대화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도 한·중간 정치·안보관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交易逆潮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경제관계는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역경제 불럭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간 교역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중국은 9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WTO 가입문제에 대해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양국간 경제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 韓·러關係

1990년 9월 수교이래 5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로 상징되듯이 한·러 양국은 1994년 이래의 「建設的 同伴者關係」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간의 TV영상 대담(3.14)이 있었으며 외무장관회담(5.7, 모스크바; 7.22, 자카르타)과 국방장관회담(11.4)이 개최되었다.

정치면에서 1996년 한·러관계는 「4자회담」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不協和音을 노정시켰다.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안(4.16)한 직후 러시아는 접경 강대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4자회담」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4자회담」이 러시아가 그동안 제안해 온 한반도문제 해결의 多者主義的 接近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역할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는 수 차례에 걸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에 대한 참여의사 표명(1.8, 4.18 파노프 차관, 6.29 프리마코프 장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사분야와 경제분야에서 1996년 한·러 양국관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았다. 군사교류 분야에서는 경협차관 償還 차원에서 T-80U 전차, BMP-III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지대공미사일 등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 무기가 도입되었다. 현재 러시아 무기수출회사 「로스바루제니에」 서울지사가 설립되어, SU-35/37 전투기, C-300V 방공시스템, 해군 방공시스템, 함정용 크루즈미사일, 블랙샤크 전투용 헬리콥터, Mi-26 수송용 헬리콥터 등의 도입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해군 300주년 기념식(7.28)에 우리 함정이 참가하였으며,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韓·러 軍事協力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양국간 군사분야 협력이 제도적 기반확립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교류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12번째, 러시아는 한국의 17번째 교역상대국인 바, 한·러 양국은 연간 40~50%의 交易量 증가로 1995년 33억 달러(수출 14억달러, 수입 19억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금년 한국정부는 모스크바, 연해주,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내 3개 지역을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선정(2.1)하였다. 삼성, LG, 대우 등도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을 핵심 진출지역으로 규정하고 流通網 확충, 현지공장 건설 등을 통해 시장공략을 가속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대러시아 수출 주종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제품 등에 대한 一般特惠關稅(GSP)가 연초부터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되어 4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한국은 최초로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모스크바 한·러 무역 센터(KRTC) 착공식(7.22), 한보그룹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7.8), LG상사의 사하 유연탄광 공동개발 참여(6.11), 나호트카 한국공단 건설사업 본격화 등 對러시아 투자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극동개발 투자는 이르쿠츠크·사하지역으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북경을 거쳐 충남 서천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계획과 맞물려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현안으로 되어 온 大使館 부지문제가 서울과 모스크바의 부지 2,400평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타결되었으며, 활발해진 인적·물적 교류에 따라 증가된 경제관련 범죄를 공조처리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안도 가서명(6.13)되었다.

1997년 한·러 양국관계는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주장과 남북한 등거리 실리외교 차원의 兩者主義的 접근이 표면화되면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담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防産物資 도입을 통한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경제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II. 北韓情勢

1. 對內情勢

가. 權力承繼 및 理念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은 1996년에도 김정일은 당총비서 또는 주석직에 공식 취임하지 않았으나, 군최고사령관 직책으로 실질적 통치를 계속하였다. 김정일은 최광, 이을설 등과 함께 「사로청대표자회의」¹⁾ 폐막식 참석(1.19) 이래 총 48회(12.26 현재)에 걸친 각종 공식행사에 참석하였다. 이같은 활발한 활동은 김일성 추모 분위기를 승계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김정일 '현지도'의 특징은 그가 군부를 체제수호의 보루로 간주하고 군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금년 중 군부대 방문 18회, 군관련 행사 16회 등 총 34회에 걸쳐 군위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참석한 공식행사 중 3/4에 달하는 것으로써 그의 군위상 제고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최광,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1)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은 이 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 군부 핵심인사들을 수행시킴으로써 군부와의 유대를 과시하였다.

군중심의 권력행사는 김정일이 국가전반에 걸쳐 김일성과 같은 권위와 카리스마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초월자의 지위에 서기 보다는 군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이 중요시되는 정책들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그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제약받게 되는 셈이 된다. 즉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이란 직함으로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그의 자율적인 정책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특정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새로운 이념적 혹은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대신에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하는 작업과 함께 그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특히 북한이 신년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1.1)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고 강조함으로써 ‘붉은기 철학’을 새로이 제기한 점이 주목된다. 「로동신문」(1.9)은 ‘붉은기 철학’이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와 창조의 철학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부터의 변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동 신문은 붉은기 철학이 김정일이 혁명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철학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사상가적 면모를 내세워 김일성과의 制限的 差別化를 시도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독자적 이미지 구축 작업은 그의 생일(2.16)과 당사업시작 기념일(6.19)을 즈음하여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32년 당사업의 역사를 “위대한 영도자의 자랑찬 연대기”(「로동신문」, 2.1)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그를 “결출한 사상이론가이며 철학자형의 위인”(「중앙방송」, 6.18)으로 우상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정일 스스로는 청년절 5주년에 즈음하여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란 담화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8.24)에 발표하여 신세대에 대한 그의 이미지 구축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여기서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을 예로 들면서 혁명 3, 4세대들이 혁명 1, 2세대의 업적을 이어받느냐 여부가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한다면서 청년학생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 구축 작업은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이 ‘총폭탄’이 되어 그를 옹위해야 한다는 통속적 구호에 의해 극치를 이루었다. 이것은 북한이 군사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7년 북한은 김정일 최고지위 취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정

일의 사상가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군우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지지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최고지위 취임과 관련,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권위를 확보하는데 대한 자신감 여부와 경제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고려하여 그의 등장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經濟動向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1.1)에서 밝힌 1996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다지기 위해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 증대, 경공업부문에서는 생필품 증산,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수출품 생산 증대를 강조하였으며, 석탄공업,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절약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95년에는 1994년의 -1.7%에 비해 더욱 감소한 -4.5%의 실질경제성장률(GDP 기준)을 보임으로써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경상GNP(억 달러)	231	229	211	205	212	223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957
실질경제성장률	-3.7	-5.2	-7.6	-4.3	-1.7	-4.5

자료: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1996.6).

더욱이 금년은 「제3차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라 1993년 12월 설정하였던 완충기(1994~96)의 종료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완충기 정책의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 이는 완충기의 주요 과제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가 실패로 돌아감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경제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에서 봄철의 냉해로 곡물 파종 시기가 2주 이상 지연되었으며, 7월 하순의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나타났다. 그 결과, 금년 곡물 생산량은 370만톤(95년 생산량은 345만톤, 평년 생산량은 약 400만톤)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670만톤 정도이며, 금년에 기확보된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도입량

(무상지원분 포함) 50만톤과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지원 및 수입량을 감안하면 북한의 곡물부족분은 200만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1997년에도 심각한 식량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²⁾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은 금년에도 원유와 전기를 포함한 생산원자재 부족, 수송부문 병목현상, 경제침체에 따른 근로자 사기저하, 인센티브체계 결함 등의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가동률이 30%수준에 머무는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광공업 부문의 부진요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부족문제이다. 정상적인 산업가동률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연평균 원유수요량은 250~300만톤 규모로 추정되나, 금년의 경우 경수로 지원용 유류 15만톤을 포함, 총 유류 도입량은 110만톤 수준에 머물렀다. 1997년에도 북한의 유류공급 상황은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북한의 극심한 원유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지리적 환경 및 근로자 소득수준 등이 더욱 열악한 광업부문에서의 원자재 부족, 근로자 사기저하, 설비노후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므로 북한 에너지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채굴 산업 역시 매우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7년에도 채탄산업 부진에 따른 전력생산 차질로 인해 북한 제조업 부문의 산업가동률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 북한 곡물 생산 및 수요량은 통일원 평가치임.

건설부문에서는 재정부족으로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탄광 갱도, 농업용 저수지, 도로의 개축사업과 나진·선봉지역 외자유치를 위한 일부 기초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위주의 단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1995년에 비해 더욱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도 계획과는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므로, 북한의 건설 부문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1995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5억 달러로 1994년에 비해 6,000만 달러 줄어들었고, 이러한 대외무역 감소추세는 1996년에도 지속되었다.

<표 2-2> 북한의 대외무역

(단위: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교역규모	47.2	27.2	26.6	26.4	21.1	20.5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자료: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1996.6).

금년 상반기 북한의 무역실적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이 감소됨으로써 전체규모 역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수출은 1995년 동기보다 13.3% 감소한 2.6억 달러, 수입은 5.0% 감소한 5.7억 달러, 수출입총액은 1995년 상반기의 9.0억 달러에 비해 7.8% 감소한 8.3억 달러인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다.

금년에는 그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남북한간의 물자 교역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4년 1억 9,455만 달러(통관기준)에서 1995년에는 2억 8,729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는 1~9월 동안 1억 9,475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5년 동기실적 2억 2,594만 달러에 비해 14% 감소하였다. 교역규모에 있어서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개방정책과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외자유치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1995년 12월 이후 제정된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으로는 「합작법시행규정」('95.12.4)과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95.12.4)을 비롯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2.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2.14) 등이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규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공무역규정」(2.1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3.28),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

정」(4.30),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4.30),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7.15),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7.15),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7.15) 등이 제정되었다.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기 투자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단순하고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개발의 우선순위를 중계수송업, 관광업, 공업부문 순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나진·선봉지대 개발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호텔의 마무리 공사, 신해지구내 관광여관건설, 비파지구 관광도로 확장공사 등의 진척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유치실적은 계약실적 49건에 3억 5,000만 달러, 실제투자는 22개 사업에 3,400만 달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진·선봉지대 현지에서 개최된 국제투자포럼(9.13~15)에서 2억 8,2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합영합작 실적은 조선 대성은행과 홍콩페레그린사가 운영하는 합영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의 개설과 (주)대우와 조선삼천리총회사가 합영으로 설립한 남포공단 「민족산업총회사」의 조업개시 정도이다. 1996년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생산부문의 비교우위 개발에 의한 경제회생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획득에 역점을 두었으며, 나진·선봉지역의 외자유치 실적도 극히 부진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아, 1996년에도 북한당국은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절약강조, 노력선동에만 의존하는 등 기존체제내에서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또한 2년 연속된 수재와 집단적 영농체제로 인한 인센티브 결함, 농업원자재 공급난 등의 요인으로 식량사정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생필품 공급 감소로 인해 주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회 전부문에 걸쳐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당국의 경제통제력 저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공식 부문 경제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계획부문의 물자가 불법수단을 통해 암시장 등으로 유입됨으로써 공식배급망의 물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 북한주민들 대다수는 생필품 수요의 70% 이상을 암시장이나 불법수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보아 1996년 수준이하로 쇠퇴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활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확산되어 온 비공식 부문 경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은 정치적 불안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생존수단의 일환으로 비공식 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할 것이나, 제도적인 경제체제 개혁 조치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체제개혁조치 없이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 社會動向 및 人權實態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선전선동과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였다. 인권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남한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6년 ‘붉은기 철학’을 내세우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재해석한 ‘장군님의 한식술론’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 및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사회는 정신적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 및 지식층의 탈북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탈북자를 ‘혁명을 버린 비겁자’로 매도하는 한편,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외부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고자 각종 총화와 학습강연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청년절 5돌(8.28)에 발표한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라는 김정일의 담화를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5.30)을 통해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밖에도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혁명적 의리,’ ‘동지애’ 등의 선전구호를 내세우며 사회동요 방지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금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이 강화되어 청년학생들의 소위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가 평양, 개성, 신의주 등에서 연달아 개최되었으며,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주년을 경축하는 「충성의 맹세모임」, 「경축야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4.9). 소년단 창립(6.6) 50주년에 즈음하여서는 「축복의 편지 이어 달리기」를 처음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김정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촉구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중앙방송(8.21)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만드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해방 51주에 즈음한 「로동신문」 사설(8.15)과 정권창건 48주년을 맞아 열린 「중앙보고대회」(9.8)에서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충신이 될 것”을 호소하였다.

북한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거주이전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농장관리국이 반국가사범 또는 반민족범죄자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관리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소에 10~20만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³⁾ 강제송환된 탈북자수는 94년과 95년 2년간 140명에 달하였으며, 금년에도 48명이 이미 송환되었고 3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60년대 초반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근거하여 탈북자들을 강제송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민족반역자’로 분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따라서 중국내 은둔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한국대사관이나 한국기업인들 혹은 종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생존의 길을 스스로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

3) 「동아일보」, 1996.12.26.

해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교(朝僑)나 북한 특무에 의한 신변안전 위협에 따라 홍콩이나 베트남과 같은 제3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3.18-4.26, 제네바)에서는 EU 의장국인 이태리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북한의 정치적·종교적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태리는 북한을 포함한 5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산가족문제 및 양심수 구금 등 북한내 다양한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의 설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가까운 장래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내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1997년에도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암시장 등 사적 부문이 활성화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통제기구의 증설·강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재 및 식량의 사적 거래, 주민들의 개인이익 추구, 뇌물수수, 절취, 줌도둑 등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바, 경제난이 완화되지 않는 한 당국의 사상교양을 통한 대주민 설득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사회통합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부정부패 및 사적 거래와 관련된 경제사범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식량구입 목적의 주민자유이동 및 대외 밀무역 목인, 터밭과 돼기밭 경작 허용, 농민시장내 식량 및 생필품의 사적 거래 허용 등은 중장기적으로는 체제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 軍事動向

1996년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비해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상 국방규모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 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군사분계선 작전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시위성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북·미잠정협정 체결’ 제의(외교부, 2.22) 이후, ‘정전협정 파기 위협’ 비망록 발표(판문점대표부, 3.9), ‘비무장지대 유지 불가, 대응책 강구 예정’ 담화발표(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3.28), ‘MDL/DMZ 의무포기’ 선언(판문점 대표부, 4.4)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특히 북한군은 연속 사흘간(4.5~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기관총·박격포 등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한·미 연례군사 평가회의('96.9)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하에서도 군사력 증강 우선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장사포나 다용도 미사일 개발, 소형 잠수함 건조 등 실질적인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병력은 105만 5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5천 명이 늘어났으며, 총군단수도 19개에서 20개로 증편되었다. 특히 북한 지상군은 휴전선 접경인 황해북도에 1개 지구사령부를 정규군단으로 증편함으로써 각 도에 1개 이상씩 「완전임무형」 군단을 확보하여 각도별로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북한은 공세전력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기습공격 능력을 증대시키고, MIG-17/IL-28을 대규모로 전방배치하여 약 6분대의 서울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평원선 이남에 배치된 항공전력은 400여 대로서 총전술기의 48%에 해당된다. 북한의 공군 전투기 전체가 기습공격이 가능하며 이들 대부분이 8~12분내 수도권 공격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북한은 초전화력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170/240mm 장사포를 전방지역에 증강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 항만에 기뢰를 부설한다든가 기습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잠수함, 잠수정, 고속상륙정 등의 증가도 뒤따르고 있다. 북한은 기습상륙 강화를 위한 연안 작전용 소형 잠수함, 공기부양정 등 10 여척의

합정이 추가 건조되어 총 800여 척의 합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의 동원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10만여 명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특수요원들은 남한의 후방에 침투하여 테러, 습격, 폭파, 교란활동 등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은밀히 침투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AN 2기, 글라이더, 대형기구 및 MI계열 헬기, AN 24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강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5백여 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해 왔으며, 황해도 미사일 기지를 증편하는 등 지난 1994년부터 전방군단 지역에 3개 스커드미사일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1996년 북한은 한·미동맹관계 이완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대미 안보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의 군사력 약화를 기도해 왔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1997년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도력에 대한 문제, 엘리트 및 일반 주민들의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충성심 전이 문제 등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정통성과 강대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공격력 강화정책을 견지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투쟁분위기를 고취할 것이다. 김정일은 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같은 공격무기 개발위협을 대미접근의 주요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미사일이나 핵무기는 향후 북한의 대남 군사적 열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대내문제가 심화될수록 김정일정권은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충돌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조성하려 들 것인 바, 대남기습침투역량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목표로 한 대미 안보 접근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主要 對外動向

가. 北·美關係

1996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 개설, 미군유해 송환, 미사일 개발 및 수출통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국관계를 진일보시켰다. 북·미관계의 진전은 양국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을 구축하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진행되기 시작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미국무부 한국담당관인 골드스타인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북한측과 협의하였다(9.23). 북한은 아직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미외교행낭과 외교관들의 판문점 통과, 미국의 대북정보수집, 美해병대의 평양 연락사무소 주둔,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비용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간 베를린 미사일 협상(4.20~21)에서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및 핵운반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 이전을 금지하기로 한 MTCR을 준수하도록 북한에 요청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동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부품, 미사일 발사대 수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군유해송환 협상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은 2차례에 걸쳐 미군유해송환 협상을 벌였다(1.10~12, 5.4~9). 북한이 과도한 유해발굴비용을 요구하고 유해송환과 평화체제수립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협상타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미국이 2백만 달러의 유해송환금을 북한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유해협상에 합의하였다. 북·미공동발굴팀은 7월 10일부터 한국전 당시 B-29 전투기 추락지점을 중심으로 1차 발굴작업에 들어가 유골 1구를 발견했다.

제네바 합의의 주 안건인 핵동결 작업 및 대북 중유제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5MWe 원자로의 재장전을 포기하고, 50MWe, 200MWe 원자로건설을 중단하였으며, 8천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밀폐보관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 중 절반 이상을 완료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동결 작업 진척에 따라, 50만t의 금년분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안건 외 북한과 미국은 비정치적 접근을 통해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모색하여 왔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를 해제함으로써(4.7), 구호용 식량, 보건·의약품류, 의류 및 생필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제공이 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 또는 공인된 구호단체·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미국은 유엔인도지원국(UNDHA)이 현지조사(5.14~24) 결과 마련한 '유엔 긴급 대북 원조계획'에 따라 62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미간 경제관계와 관련, 미국의 1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95.1)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폭넓은 경제교류·협력은 1996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직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간 경제관계와는 달리 인적 교류는 다소 진전되었다. 미국

이 북한을 ‘부랑아국가’(Pariah States) 명단에서 제외시키고(’96.1), ‘여행경고국’(Travel Warnings)에서 제외시킨 조치(’96.2)는 미국인의 북한방문과 양자간 인적 교류의 길을 터 놓은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테러 행위가 없었고, 향후 유사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북한이 미국에 보낸 점 등이 크게 반영되었다.

인적 교류는 학술교류를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김문성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서기장과 대표단(1.18),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일행(4.23), 김철남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일행(4.23), 박승덕 주체사상연구소장과 관리·학자(4.24),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일행(4.29), 이근 외교부 미주과장 일행(6.23) 등이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였다. 특히 김정우, 리종혁, 박승덕 일행은 미정부 관리와 접촉하였다.

북·미간 인적 교류는 양국간 적대 감정을 완화시키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미정부는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 하고, 북한은 인적 교류를 진전시켜 관계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접근을 통한 양국 관계개선 노력은 ‘잠수함침투 사건’(9.18)으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주 내용인 핵동결 및 대북 중유제공은 이행되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수로 지원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1997년 북한과 미국은 핵동결, 대북중유 제공, 경수로건설사업

등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군유해발굴, 미사일 개발 및 수출통제, 생화학무기 감축 등 북·미간 현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4자회담」의 틀속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개설, 대북식량지원 및 제2단계 대북경제제재완화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적 교류 및 대화의 폭을 넓혀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北·中關係

1996년 북한과 중국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 견해차가 노정되었으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상호 상대방과의 전략적 유대관계 지속 필요성으로 우호관계가 지속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북한과 우호관계 유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대미관계 개선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작보고」(35)를 통해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한국과는 평등·호혜·합작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반도 균형외교정책을 지

속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탈북자문제가 북·중간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중국은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난민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李紀周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이명운 북한 국경경비총국 부국장은 북경에서 북한인의 불법 월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담(10.18)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동 회의에서 불법 월경 북한인들의 범죄행위가 중국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7.11)을 맞아 군사부문에서 친선발전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은 王繼英 북해 함대 사령관 지휘하에 여대급 구축함 2척을 북한 남포항에 파견(7.10~12)하여 북한과의 돈독한 군사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이외에도 이상우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군사대표단 일행이 중국을 방문(3.23),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上海 등 지방군구를 시찰하였다. 羅幹 중국 국무원 비서장겸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대표단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조인 3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7.10~13)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사후 중국 각료의 최초 북한 방문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재확인(4.5)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판문점 비무장지대내 병력투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관계를 고려하여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나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는 반대(4.11)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비록 정전협정 서명국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관련 당사국이라는 데 반대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기 위해 「4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4.16). 중국은 남북한, 북·미간의 문제해결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선 북·미관계 수립, 후 남북관계 개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최우진 북한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4자회담」을 비롯한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논의(6.6)하였다.

북한의 금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실적은 총 2억 4,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6월까지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출 2,700만 달러, 수입 2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은 21.7%, 수입은 7.2%가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1996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은 전년도에 비해 11.2% 증가하였다.

북·중간에는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기관원들의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외경제무역협작부가 국경무역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2.25), 북·중 밀무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성남 북한정무원 경제담당부총리 방중시(5.21~25), 북·중 양국은 비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동협정에서 북한에게 식량과 석유를 원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부총리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기는 1995년 1월 김복신 부총리 방중이후 1년 4개월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홍성남의 방중은 북·중관계가 북·미간의 관계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 북한의 경제위기 및 중국내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1997년에도 북·중간에는 전략적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김정일 권력승계 시점을 전후하여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이 있는 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주권을 회수하고 15차 당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국인 북한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제원조를 계속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한·중 수교 5주년을 계기로 예상되는 한·중간 정치·안보협력 확대와 15차 당대회시 중국 지도부 세대교체는 북·중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北·日關係

1996년 북·일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부진하였다. 경제관계에서만 예년 수준을 유지했을 뿐 정치적 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對日비난이 거듭된 가운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양국간에 최대 현안은 수교회담의 재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비단 양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금년에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수교회담의 재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북한의 대일반응은 모두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북한은 일본의 하시모토(橋本) 내각이 출범(1.11)하자 「로동신문」 사설(2.4)과 논평(2.26)을 통해 지금까지의 '남한일변도'이고 비자주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을 일본에 촉구하고,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3월 중순 경에는 북경에서 수교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과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고 수교회담 재개 합의를 채택(1995.3.30) 1주년을 맞아 일본 정계 인사들의 북·일수교 관련 발언을 종합 보도(4.2, 중앙방송)하고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을 초청(5.14~5.21)하는 등 일본과의 수교회담 재개에 강한 희망을 나타내었다.

이밖에도 북한은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사민당 대표단('96.2) 및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96.3)을 초청하는 등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96년 북한의 대일반응은 시기적으로 뚜렷이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해 매우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으나, 하반기에는 일본의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이케다(池田)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2.9)에 대해 상반기에는 「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이 아닌 「민민전」 방송(2.10, 2.13)만을 통해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낸 범죄적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을 뿐 당국의 입장 표명이나 공식 언론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는 등 대일비난을 자제하였다. 이는 독도 문제를 수교협상 속개의 장애물로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이 제의(4.16)되고 이케다 외상이 기자회견(5.1)을 통해 “한반도 「4자회담」이 진행된 후 북·일간 국교정

상화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북한외교부 이철진 과장이 訪日時(6.24~7.1) 요구한 수교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일본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북·일간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한 중앙통신사 대변인의 비난 성명(6.27, 9.15)을 통해 수교회담 재개와 「4자회담」을 연계시키고 있는 일본측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방송」 시사논평(7.4, 7.7)을 통해서도 “국제사회가 「4자회담」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시모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쓸데없이 간참하는 주제넘은 소리”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외교부 대변인도 「중앙통신」 기자회견(7.26)을 통해 수교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였다.

일본측 태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독도문제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서도 반영되었다. 북한은 하반기 들어 「중앙방송」(8.13)과 「평양방송」(8.17)보도를 통해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협의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기도에 대해서도 「로동신문」 논평(9.2)을 통해 ‘염치없는 행위’로 비난하면서 “이에 앞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 및 필요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독도문제의 해결이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자체를 저지하려는 데 있다기 보다는 그동안 주장해 온 중군위안부 보상을 포함하여 과거청산에 따른 충분한 보상 확보 및 수교회담 조기 실현 등 반대급부를 최대한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무역은 246.3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하였다. 수출은 130.9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3.6%, 수입은 115.4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2.3% 각각 증가하였다. 최근 북한의 對日무역은 규모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에서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역규모의 증가는 쌀(일본의 유상지원분), 섬유임가공용 원부자재의 도입 등 對日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금년 상반기 대일무역은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의 3,290만 달러에서 1,48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상반기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상품은 위탁가공제품인 의류, 수산물, 벗짚, 광물성 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출규모가 대일 전체 수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상품은 방직용 섬유원료, 전기기기, 수송기기, 기계류, 광물성 원료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입규모 역시 대일 전체 수입액의 68%를 점하고 있어 북한의 대일 교역상품 구조는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북·일 무역규모는 최근의 교역상승세에 비추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대일채무 미해결, 북한의 결재통화 부족 등으로 인해 당분간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동경(7.15) 등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나진·선봉지대 투자 설명회 개최 및 9월의 투자포럼 참가단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1997년에도 수교회담 재개 여부는 북·일관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일관계는 북·미관계 진전, 남북대화 재개 및 「4자회담」 성사와 연계되어 있다. 1997년에도 일본이 한·미·일 공조라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4자회담」이나 남북대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1996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라. 北·러關係

1996년 북·러관계는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복원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5년 기한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협정」을 체결(10.28)함으로써 러시아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게 되었다. 북·러는 수산업분야 협조에

관한 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대한 합의서의 조인(10.12)을 통해 양국간 어획할당량을 비롯하여 어로, 양어, 양식 등 전반적인 수산업분야에서의 상호협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간 철도운송협상이 타결(7.23)되어, 북한의 핫산역 사용이 재개되었고 북·러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4.12)됨으로써 무역·경공업·임업·채취공업·과학기술 등 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국가두마(하원) 지정학문제위원회 주최로 의회청문회를 개최(6.5), 한반도 사태의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고 북·러관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러간 각 방면의 가장 유리한 협조조건을 보장할 법안들을 작성·채택할 양국간 의원연맹을 창설하는 문제와 야쿠츠허-평양-서울간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계획도 토의하였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양국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물론 러시아가 2월에 발생한 러시아무역대표부(9.13폐쇄) 무장군인 난입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무력진압을 묵인함으로써 관계복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무차관 파노프는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35주(7.6)를 맞아 작년 8월 러시아가 북·러기본우호에 관한 조약 초안을 북한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초안에는 제3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 쌍방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배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효기간이 만

료됨에 따라 동 조약은 폐기되고 현재 대체조약 체결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9.10). 한편 북한은 러시아가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BMP-3 장갑차와 T-80U 탱크 등의 군사장비를 한국에 제공한 것과 관련 전쟁도발을 부추기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라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9.30).

한편 러시아는 「4자회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다자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시 한반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10.16)함으로써 중국처럼 한반도 등거리외교를 표방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하원의장 겐다니 셀레즈뇨프를 단장으로 한 러시아 국가회의 대표단을 초청(5.26~29)함으로써 양국간 우호증진을 과시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당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냄으로써 러시아 정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공산당의 득세를 사회주의 우월성으로 선전하려 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은 엘친대통령에 반대하는 친공산계 극우보수성향의 정치조직인 러시아민족구국전선 대표단과 회담(8.12)을 갖기도 하였다.

1997년 북·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호방위조약 문제, 러시아의 KEDO참여 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문제, 「4자회담」문제, 러시아내 벌목공 문제 및 마약밀매문제 등이다. 러시아는 KEDO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1.8), 북한이 경제난 타결을 위해 마약밀매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11.13).

상호방위조약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삭제 내지는 개정된 상태로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반도 균형외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간 경제협력문제는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정책으로 인해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對南動向

1996년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당국·비당국 분리의 대남 강경태도와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였고, 정·경분리의 적대·유화적 태도를 병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공산화 통일기반 조성차원에서 通美封南의 남한배제적 대미접근정책과 더불어 대남 선전·선동 및 무력침투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을 요지로 하는 제주선언(4.16)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①북한의 안정, ②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③합의통일 추진이라는 평화통일 3원칙과 ①남북당사자원칙, ②유관국 협조, ③기존 남북합의사항 존중이라는 평화체제구축 3원칙을 북

한에 제의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조문파동 이래 지속해온 남북대화 불응 입장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4자회담」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미 평화협정 우선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전개해 온 「주 대미협상, 종 남북대화」의 전략구도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은 남북대결을 촉진시키고 남조선혁명을 유도하기 위해 대남공작과 비방을 강화하는 등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였다. 예컨대 베를린에 있던 「범민련」 국제본부를 심양으로 이동시키고, 전년에 개최하지 않았던 「8·15 범민족대회」를 금년 평양에서 다시 개최하고 「한총련」(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대표를 초청하였다. 그리고 남한정부에 대해 「사대매국정권」, 「파쇼정권」 운운하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한총련 등 반체제세력에게 반체제 투쟁을 선동하였다.

셋째,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당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북한은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9.13~15)에 참가를 신청한 남한측 신청자 53명(기업인 24, 기업관련인 5, 공사관련자 1, 정부관계자 12, 언론인 11명) 중 기업인 23, 중소기업협동조합·담배공사 관련인 각 1명 등 총 25명 만을

선별초청함으로써 우리측의 불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북한은 금년에도 수해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종교단체의 원조에 대해서만 은밀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북한의 선별초청과 수용은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고 당국간 접촉을 회피하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넷째,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대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련의 고의적인 대남도발과 선동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①북·미 「잠정협정」 체결, ②판문점 북·미 「군사공동기구」 설치, ③북·미 「장성급접촉」 등을 제의하였다(2.22). 또한 북한은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상에서 무력시위와 당·정간부들의 발언을 통한 「전쟁위기로」 확산 등을 통해 대남 도발을 지속하였다.

러시아 주재대사 손성필(4.2)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4.4)은 “조선반도 전쟁발발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김광진(4.9)과 노동당 비서 최태복(4.14)은 전투동원태세 견지를 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연평도 서남 9마일 해상까지 남하(4.19)하였고, 북한군 7명(장교 1, 사병6)이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침범(5.17)하였다.

결국 1996년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남한을 대미관계 개선으로

인해 상실된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동포'로 활용하는 '적대적 공존'을 지향하는 이중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위협론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경제난의 타결을 모색하며, 나아가 '통일전선'사업을 지속함으로써 향후 공산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국간 대화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출범과 장기 지속을 위해 부담이 큰 대남관계보다 대외관계 및 대내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이는 편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에는 그의 강력한 정치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대미·일관계 개선'의 전략구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카리스마와 정치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부 강경세력을 활용하여 '선 대미관계 개선, 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략구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7년 말 남한에서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영삼 정부와 대화하기 보다는 김정일의 공식 취임과 남한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남 경제문제와 관련, 북한은 당국간 대화거부와는 달리

민간 경제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경제교류 협력을 추구하는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경제난 타결과 더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지원의 원만한 이행과 연락사무소의 조기개설 등 대미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비당국간 남북대화에 최소한 형식적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당국간 대화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7년 대선과 남한 경제의 불경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남한사회를 교란시키고, 남북한간 '적대적 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 세우기 투쟁'을 적극 선전·선동함으로써 남한사회의 내부분열과 통일역량 약화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넷째, 대남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남 긴장고조 전략을 당분간 지속하는 한편, '평화옹호운동'을 해외에 선전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같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북·미 양국간의 관계개선 속도와 폭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Ⅲ. 南北韓 關係

북한은 1996년 한국배제·대미관계우선전략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남북간 공식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경수로사업, 남북교역 및 시범적 경험,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등 양 정부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남북한 관계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전면적으로 동결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제안한 「4자회담」에 진전이 없었다.

1997년에는 잠수함사건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도 국면전환을 맞이할 것이며, 「4자회담」에 대한 3자공동설명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 고수로 인해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수로사업과 민간부문에서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금년에 비해 비교적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1. 南北對話

1996년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무력도발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휴

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한국의 당사자자격을 부정한 채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해 왔으며, 1994년 4월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조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북·미장성급접촉을 제안하는가 하면, 북·미군사회담과 남북군사회담의 병행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⁴⁾ 북한의 중간조치는 북·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북·미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96.2.22)으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북한은 금년에도 「기본합의서」('92.2.19 발효)에 반하여 「군사정전협정」('53.7.27)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⁵⁾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한 임무포기 담화”를 발표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지부착 중지를 선언(4.4)하였다. 이어 4월 5일부터 3일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군사도발 행위를 취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4) 1995년 9월 북한은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 미 카네기재단 연구원에게 북·미간 「상호안보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간에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95.9.28.

5)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4.16)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대표간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하게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8개항의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同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고, 「4자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 대답을 유보한 채 「4자회담」의 목적과 현실성에 관하여 미국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좀 더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5.7)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제주도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공동 참여하는 설명회 형식의 3자접촉, 이른바 '3자공동설명회'를 북한에 제안(5.13)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同 설명회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비난하며 이를 거부(5.24)하였다.

한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 올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문제와 긴장완화 조치문제 외에도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음을 수 차례 언급하였다. 특히 제51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 군사적 신뢰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문제도 논의될 수 있

다고 밝혔다. 경제협력문제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첫째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용의가 있으며, 둘째 나진·선봉지역의 투자와 남북교역을 확대하여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며 한국관광객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4자회담」에 대하여 북한은 1996년 말까지도 확실한 의사표명 없이 ‘검토 중’, ‘미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계속 가부의 결정적 반응을 유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4자회담」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외교부, 군부 및 당간에 입장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잠수함사건은 남북한 긴장관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남북대화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던 경수로사업이 중단되었고 남북경협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합의('94.10.21) 이행구도와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다.

한국은 잠수함사건 이후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활동 중단, 제7차 경수로 부지조사단 파견 유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북한은 무장공비침투 사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10.21)하였다.

한편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경수로사업의 중단을 이유로 사용 후 연료봉의 봉인작업을 중단하였다. 또한 북한은 잠정적으로 판문점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시키고 그 업무를 중단할 것을 발표(11.19)했으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회의(11.14, 11.19, 11.26)에서는 잠수함이 훈련중 표류했음을 주장하면서 승무원 유해송환을 요구함은 물론, 무장간첩의 사살에 “백배 천배”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미 정상은 마닐라에서 개최(11.24)된 APEC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해 제네바합의 이행과 「4자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수용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경수로사업 및 「4자회담」의 추진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의 촉구를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사과방식 및 사과수준, 대북지원 및 대북경제제재 완화의 속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조화 등이 한·미간의 협의사항으로 남게 되었다.⁶⁾

1997년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반기에는 잠수함사건의 해결여부, 하반기에는 김정일 권력승계 및

6)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에 대해 한국은 사과와 '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하는 바탕위에 북한이 잠수함침투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약속'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미관계 전개 등에 의해 남북한 관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 추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도 대미관계 진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함사건은 북한이 우리측 요구인 “납득할 만한 조치”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4자회담」에 대한 3자공동설명회 참가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경수로사업 재개 등이 보장되는 포괄적 이행구도의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는 일단 국면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12.9~24, 뉴욕)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 대북 경제제재 완화, 중유제공보장, 경수로사업 이행, 미군유해 송환,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등 전반에 관한 미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국측에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일괄타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방식과 수준이 한국정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⁷⁾ 북한은 또한 「4자회담」 개최를 전제로 한 3자공동설명회 개최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포괄적 이행구도에 의해 3자공동설명회가 개최되더라도 남북간의 직접 대화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대내결속

7) 현재 북한은 사과의 주체 및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형철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이 마크 민턴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의 뉴욕협상(12.22)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 위한 남북긴장의 필요성, 외교적 열세만회를 위한 대미관계 진전의 필요성,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의 요인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한 「4자회담」에 대해서 계속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 남한측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이 1996년에 비해 비교적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폭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잠수함사건이 해결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대두된다면 한국의 대북식량제공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대북식량지원 3원칙(북한의 공식제외, 한반도내 회담, 대남비방·중상 중지)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때문에 이를 계기로 남북당국간 비정기적 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輕水爐事業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과 사용후 연료봉의 봉인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996년 경수로사업은 경수로공급협정('95.12.15)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첫째, 주계약자 선정과 관

련하여 KEDO는 집행이사회 결의 96-3호(3.19)를 통해 한전을 일괄도급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로 공식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KEDO와 한전은 한전을 북한에 대한 경수로공급사업의 주계약자로 지정하는 합의문에 서명(3.20)하였다. 이에 앞서 한전은 경수로건설을 위한 사업전용역(pre-project services)을 수행하기 위해 KEDO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형측량, 시공계획수립, 건설비산정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전은 경수로사업의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 KEDO에 제출(7.15)하였다. 개략사업비는 건설비용 49억 2천만 달러와 부대비용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추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공식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계약자로 지정된 한전은 1997년 중 KEDO와 주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KEDO는 1996년 7월 미국의 듀크사(Duke Engineering and Services)를 기술자문사로 선정하였다.

둘째, 경수로건설 예정부지인 함경남도 신포지역에 대한 제3, 4, 5, 6차 부지조사가 한국측 기술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표 3-1> 참조). 제1, 2차 부지조사가 KEDO 주관하에 한·미·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3차 부지조사('95.12.16~'96.1.16) 이후부터는 한전이 사업전용역의 일환으로

8) 同 협정은 경수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공급범위, 상환조건, 인도일정, 이행구조 등 전문 18개 조와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13개 후속의정서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측 전문가가 부지조사를 주도하였다.

특히 제4차 조사(1.16~2.24)를 위해 대형시추장비, 물리탐사장비, 시추드릴 등 지질조사용 장비와 부품이 부산항을 출발(1.14)하여 나진항으로 운송되었다. 제5차 조사(4.25~5.7)에서는 북한이 건설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평양-신포간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6차 조사(7.6.~7.30)에서는 북한의 기존자료를 수정·보완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환경영향평가보고서(ER)의 작성계획도 수립하였다. 아울러 부지 인근 500여 가구의 퇴거에 따른 보상으로 KEDO가 준비한 약 9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가 전달되었다.

이상의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전은 개략적인 부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KEDO에 제출하였다.⁹⁾ 이에 의하면 신포지역이 원전건설 예정지로서 안전성면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9) KEDO는 한전이 제출한 同 보고서를 검토한 후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인데, 북한은 이를 검토한 후 부지인수증을 발급하기로 되어 있다.

<표 3-1> 경수로 부지조사 현황

기간	인원구성	조사내용 및 결과
제1차 (’95.8.15~8.22)	한국: 4명 미국: 7명 일본: 4명 계: 15명	○러시아 조사자료 요약분 인수, 유용성 검토 ○부지적합성 검토 -지진·지질·수문·기후·건설환경 등 기초 육안조사
제2차 (’95.10.24~11.4)	한국: 7명 미국: 9명 일본: 3명 계: 19명	○부지안전성 조사 평가 -지진·지진(계기설치)·자연재해 등 ○러시아 조사자료 검토 ○부지적합성 평가 및 시공성 검토 -취배수·전력·통신·용수·도로·건설 재원 등
제3차 (’95.12.16~96.1.16)	한국: 11명 미국: 2명 일본: 2명 계: 15명	○지형측량 및 지형도 작성 ○지진 감시계측기 운용 점검 ○예비 지질조사 준비사항 협의
제4차 (’96.1.16~2.24)	한국: 19명 미국: 2명 일본: 2명 계: 23명	○지진 반응조사 ○연안 수심측량 및 해양조사 ○암반조사를 위한 굴착공사
제5차 (’96.4.25~5.7)	한국: 8명 미국: 2명 일본: 2명 계: 12명	○부지인근의 기존 하부구조 조사 ○신·증설에 필요한 하부구조 관련 자료수집 및 협의 ○초기사업계획을 위한 경제·사회적 여건 조사 및 자료확보 관련 협의
제6차 (’96.7.6~7.30)	한국: 16명 미국: 1명 일본: 2명 계: 19명	○PSAR, ER 작성 자료수집 ○북측보유 러시아 부지조사 자료에 대한 공동 평가

셋째, 후속의정서와 관련하여 KEDO와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다음의 3개 의정서에 서명(7.11)하였다. 먼저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EDO는 북한 내에서 법인격을 가지며 계약체결, 동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소송제기, 북한당국과의 협상 등의 권한을 가진다. 면책대상지역은 경수로사업부지¹⁰⁾, 관련지역¹¹⁾ 및 연계지역¹²⁾으로 구성된다. KEDO와 KEDO 자산은 모든 형태의 법적, 행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고, KEDO인원에게는 외교관 특권을, 주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는 준외교관 특권을 부여하며 직원가족의 동반거주가 허용된다. KEDO가 부지내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북한은 KEDO의 질서유지에 간섭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KEDO계약자 인원¹³⁾이 북한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못하며 이들에게 정치·사회적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
- 10) 건설부지, 주거 및 후생복지시설지역, 「부지인수·부지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지를 포함한다(제2조 a).
 - 11) 인력 및 물자를 사업부지로 수송하는 데 관련된 지역, 이를 위해 선정된 항구 및 공항, 이러한 장소와 경수로 사업 부지간 왕래 통행로를 포함한다(제2조 b).
 - 12)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회의나 기타 행사를 위하여 임시 또는 특별한 계기로 선정된 장소나 구역 및 비상사태나 기타 사유로 도달된 장소를 포함한다(제2조 c).
 - 13) KEDO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모든 인원, KEDO의 관할하에 북한에 체류하는 기타 인원 및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제17조).

있다. KEDO인원,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북한의 국내·국제 우편서비스, 전화, 팩스 등 북한내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을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 후 독자적 위성통신수단을 설치하고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는 공로와 해로를 명시하고 있다. 항공수송은 북경과 함흥 인근의 선덕공항을 이용하며 기초굴착공사 시작전까지 추가 항공로를 지정해야 한다. 해상수송의 경우, 바지선은 남북한 직항로를 이용하며 KEDO인원과 물자는 공해상 진입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KEDO인원,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의정서에 규정된 통행로와 출입지점을 임의로 선택하며, 이 경우 무비자가 적용된다.

공급협정 체결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경수로사업은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후속의정서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KEDO와 북한은 부지인수와 북한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는 바, 북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월 80~130 달러 수준에 합의(9.28)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한·미가 이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였다. 아울러 199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이 취소되었으며, 11월에 경수로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되었다.

잠수함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7년에는 다음과 같이 경수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 핵활동의 동결이 유지되고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이 재개될 것이다. KEDO-북한간에는 후속의정서 조인 및 협상이 진행되고,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마무리 조사가 실시되어 1997년 상반기중에 부지정리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가 KEDO 집행이사국에 참여하고, 중유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경수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수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KEDO-한전간에는 주계약 체결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또한 경수로사업의 비용산정 및 분담, 경수로사업의 하청 등을 둘러싸고 한·미·일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3. 交流·協力分野

1996년 남북한은 직접적인 교류없이 주로 제3국을 통해 접촉하거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교류하였다. 경제분야에서 기업인의 방북은 1995년에 이어 계속되었고, 남북교역도 꾸준히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합영투자사업이 착수되는 단계에

까지 진행되었다.

북한주민접촉현황을 살펴보면 10월 31일 현재 690건의 신청에 대해 647건이 승인되었다. 이 중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는 405건이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분야 269건(66%), 이산가족분야 79건(20%), 학술·문화·종교 등 사회·문화분야 57건(14%) 등으로 경제분야에서의 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1996년 분야별 접촉 성사현황(1.1~10.31)

(단위: 건)

구분	경제	이산 가족	학술	종교	체육	문화	관광 교통	언론 출판	기타	계
신청	331	200	50	25	14	13	15	14	28	690
승인	329	180	45	16	14	9	16	14	24	647
접촉	269	79	23	9	6	3	2	-	14	405

가. 經濟分野 交流·協力

1988년 「7·7선언」과 그에 따른 「남북경제개방조치」(‘88.10)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0.8.1)의 제정으로 제도화되면서 그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남북교역 규모가 3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일·대중 무역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96년도 남북간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접촉이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침체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남북관계의 냉각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제침체에 따른 상품수출능력의 저하가 그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금년 11월 말까지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반입 865건 1억 6,303만 달러, 반출 665건 5,978만 달러로, 합계 1,530건 2억 2,281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의 1,242건 2억 9,104만 달러에 비해 23.4% 감소한 수준이다(<표 3-3> 참조).

한편 남북교역을 통관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총 규모는 1996년 10월 말 현재 2,878건 2억 1,667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2,182건 2억 5,013만 달러에 비해 약 15.4% 감소한 수준이다. 물자교류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외 무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약 1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 남북교역 승인현황(1988.10~1996.11)

(단위: 건, 개, 천 달러)

구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88	4	4	1,037	-	-	-	4	4	1,037
'89	57	20	22,235	1	1	69	58	21	22,304
'90	75	26	20,354	4	4	4,731	79	30	25,085
'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6	198,790
'94	601	92	203,521	173	50	25,423	774	142	228,944
'95	755	120	236,075	604	86	73,751	1,359	206	309,826
소계	2,663	213	1,038,431	940	158	153,230	3,603	371	1,191,661
'96	865 (694)	119	163,033 (222,335)	665 (548)	68	59,780 (68,705)	1,530 (1,242)	195	222,813 (291,040)
합계	3,528		1,201,464	1,605		213,010	5,133		1,414,474

주 : '96년은 1~11월 누계, ()는 '95년 동기실적.

<표 3-4> 남북교역 통관현황(1988.10~1996.10)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95	976	99	222,855	1,668	90	64,435	2,644	189	287,290
'96	1,206 (805)	115 (92)	154,111 (196,214)	1,672 (1,377)	90 (75)	62,564 (53,925)	2,878 (2,182)	205 (167)	216,675 (250,139)
합계	4,445		1,030,948	3,795		171,038	8,240		1,201,986

주 : '96년은 1~10월 누계, ()는 '95년 동기실적.

반출 및 반입이 남북교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관기준으로 10월 말 현재 각각 28.9%, 71.1%로서 교역에서 반출·입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증대로 전년에 비해 불균형의 폭은 감소되었다. 주요 반입품목은 금괴·아연괴·빌레트 등 철강금속류(58.7%) 및 위탁가공물품인 의류 등 섬유류(25.3%)이었다. 반출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섬유류 원·부자재가 주요 품목(59.5%)을 이루었고, KEDO의 대북지원 중유·LDPE 등 화학제품도 상당량(23.3%)을 차지하였다. 올해 남북간 물자교류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북교역을 형태별로 보면 9월 말까지의 교역실적으로 볼 때 간접교역이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교역은 7.9%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원·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인 위탁가공교역의 규모는 승인기준으로 11월 말까지 5,462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4,414만 달러에 비해 23.7% 증가한 수준이다.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의류, 칼라TV 등이며, 참여한 기업은 총 34개사에 달하였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94.11.8)가 제정된 후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기업은 96년 10월 말까지 34개사, 208명이며, 시범적 경협사업을 위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한전을 제외하고 (주)대우를 포함한 10개사이다. (주)대우는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

내에 민족산업총회사(합영)를 설립하여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주)대우의 합영사업을 계기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북한이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9.13~15)에 우리 기업 및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 경제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 참가신청자를 선별 초청함으로써 우리측의 불참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어 발생한 잠수함사건은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경색시켰고 경제교류·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7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금년의 침체국면을 벗어나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산 반출물품의 종류 및 수량의 부족과 경화부족으로 인한 북한의 한국산 물품 반입능력 제약으로 남북교역량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임금을 통한 외화획득 및 경공업발전기회확보를 이유로 위탁가공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측 기업도 저임금 활용 및 대북투자 대비를 이유로 위탁가공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실리에 바탕을 둔 위탁가공의 규모 및 범위는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대북투자 논의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과 남포공단 및 나진·선봉지역에서의 시범적 경협사업

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1996년 남북한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학술·종교·문화 등의 국제행사에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하는 다자간 교류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95년의 63건 620명에서, 1996년 11월 말 현재 57건 491명으로 줄어들었다. 부문별로는 학술 23건 179명, 종교 9건 130명, 문화 3건 40명, 체육 6건 12명, 관광·교통 2건 6명, 기타 14건 124명 등의 교류가 성사되었다.

학술분야에서는 통일문제, 경제, 환경, 언어,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남북한 학자 또는 관계전문가들간에 접촉이 있었다. 주요 교류행사로는 제6차 동북아 경제포럼(1.18~19, 하와이),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4.19~20, 버클리), 북한경제관련 세미나(4.22~23, 워싱턴), 저어새 보전 국제워크샵(5.6~7, 북경),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협력학술회의(6.1, 장춘), 국제 핵전예방 의사연맹 북아시아 4개국회의(6.3~4, 북경), 21세기 동북아 학술토론회(8.1~4, 심양), '96 조국통일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8.5~6, 런던), 한국어 언어학자 학술토론회(8.5~6, 장춘), 제3회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8.12~14, 연길),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8.19~21, 북경), 연변대학

성인교육 학술토론회(8.22~23, 연길), 통일을 위한 남북한 및 해외학자 학술회의(9.13~15, 북경) 등을 들 수 있다.

종교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협의회(1.29~2.2, 마카오), 남북종교인회의(2.26~2.28, 니이가타),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제5차 기독교 동경회의(6.5~6.7, 동경) 등을 통해 남북 종교인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년에 목사·신부 등 종교인 6명이 북한을 방문한 데 반하여 금년에는 종교인이 방북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종교인 접촉에서는 종교교류외에 북한 수재민지원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체육분야에서 남북한 첫 접촉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군인체육대회 정기총회(4.13~25)였다. 이어 애틀란타 하계올림픽, 제19회 윌리엄존스배 국제농구대회(8.14~26, 대만) 및 제5회 동아시아 호프스 탁구선수권대회(8.26~28, 고베) 등에서 남북한간 경기가 있었다. 그외에도 가스파이프라인 연구회의(1.8~1.9, 북경), KOREAN 평화미술전(2.8~2.13, 오오사카), 세계관광기구 동아태지역위원회(3.25~27, 오오사카),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5.21~24, 오마치) 등 소규모 접촉·교류가 성사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제3국에서의 접촉·교류는 남북당국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에 유효한 교류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교류행사는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교류내용면에서도 점차 심화·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선별

적으로 호응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간의 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까지 오르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남북간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3국에서의 인적 접촉과 교류는 학술회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일문제 및 언어·문화 분야에서 남북한 학자와 제3국의 학자가 공동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人道主義的 事案

인도주의적 사안으로는 이산가족문제, 남북자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이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측에 기회있을 때마다 당국간 대화·협의를 촉구해 왔으나,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96년에도 남북간의 제도화된 공식통로를 통한 이산가족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 이산가족간의 접촉은 남측 이산가족의 개별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국내에 설치된 9개의 이산가족연락센터를 통해 개인적 접촉을 모색하거나, 중국·미국·일본·캐나다 등의 이산가족상봉 주선단체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교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대북주민접촉을 1996년 10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72가족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북한가족이 보낸 서신 386통이 접수되었고, 14가족은 제3국에서 북한가족과 상봉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1996년 이산가족 접촉 성사현황(1.1~10.31)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생사확인(가족)	35	127	132	221	135	104	72	826
서신교환(통)	44	193	462	948	584	571	386	3,88
제3국 상봉(가족)	6	11	19	12	11	17	14	90

195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의한 납북자중 미송환자는 4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 납북자문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은 지난 해에 납북되었던 안승운 목사와 한국전 당시 국군포로의 북한내 생존 가능성 등이었다. 안목사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인 리경춘이 9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납치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국정부는 안목사의 즉각 송환 및 관계자

처벌, 불법납치 사실에 대한 공식사과를 북한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목사가 자진 입북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송환을 거부했다.

국방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을 거치면서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실종된 국군의 수는 1만 9천여 명에 달한다. 한국은 수 차례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국군포로 중 생존자들은 아직 억류중에 있거나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하층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996년에도 대북 수재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조난 북한 선원을 구조·송환하였다. 1995년의 1, 2차 대북 수재지원에 이어 1996년에는 모두 7차례(3~9차)에 걸쳐 북한수재민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었다. 9차 수재지원(9.17)까지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요청한 물품인 담요, 라면, 양말, 식용유, 전지분유, 밀가루 등 총 14억 4천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구입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적십자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호소에 동참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에 현금으로 송금(7.1)하였으며, 100만 달러 상당의 전지분유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UN아동기금대표에 전달(8.30)하

였다.

북한 석탄화물선 '염분진호'가 동해상에서 침몰(2.27)하자 한국 해군은 즉시 구조활동에 들어가 북한선원 2명을 구조하고, 시체 2구를 인양(2.29)하였다. 정부는 생존선원과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3.5)하였다. 또한 폭우로 임진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북한 병사와 민간인 시신 2구를 각각 송환(7.29, 8.7)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을 통해 불법침입한 소설가 김영을 중국으로 송환(8.14)하였으며, 서해상에서 발견한 우리 민간인 시신 1구를 송환(8.12)하기도 하였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 한국은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북송교포문제 등 분야별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백서 1996」을 발간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는 바, 同 법률안은 국회의 의결(12.17)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¹⁴⁾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 지원과 정착지원시설 건립 등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14) 同 법률안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체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국제적인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내 출소 공산주의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왔다. 북한적십자회 명의로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의 송환을 거론(8.30)한 데 이어 9월에는 이른바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라는 단체명의로 김인서를 치료하기 위해 두 딸을 한국에 파견하겠다(9.3)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연맹에, 조선인권연구협의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각각 김인서 송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1997년에도 이산가족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주민접촉으로 인한 개방분위기 확산과 북한체제의 취약성 노출을 우려하여 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제도화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남측 이산가족은 개별 노력을 통해 북측가족과 접촉 및 상봉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경호 일가 17명의 탈북사건(12.9 입국)을 계기로 국경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을 통한 상봉은 1997년에 들어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1997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남한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자체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인권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조하에 북한내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조사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춘궁기 북한식량난이 심화되고 유엔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단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식량지원은 재난지역주민 및 아동구호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전년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한국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종교계 등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사업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5.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 關係

1996년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관계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관련 회의, 제네바군축회의, 유엔 등에서 전개되었다

TRADP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개최된 실무그룹회의(3.27~28, 선봉)와 중국에서 개최된 제1, 2차 협의위원회 회의에서 남북한 대표들간의 접촉이 있었다.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등의 관계자와 함께 남북한 대표들이 통신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제1차 협의위원회 회의(4.18~19, 북경)에서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과 UNDP가 참가하여 TRADP 사무국소재지를 3년간('96.7~'99.6) 북경에 설치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외 운영경비 조달방안, 사무국장 선임, 협의위원회 의사규칙, 중기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2차 협의위원회 회의(10.21~10.23, 중국)에서는 의사규칙과 일본의 협의위원회 가입 권유안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북한 등 접경 3개국의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D)에 동시 가입(6.17)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군비통제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다.¹⁵⁾

15) 제네바 CD는 제1차 UN 군축특별총회 결의('78.7)에 따라 설립('79.1)된 세계유일의 다자군축협상기구로 최초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로 설립되었으나,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개칭('84.2)되었다.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38개국이 참가하였던 CD는 금년에 남북한, 이라크, 남아공화국 등 총 23개국(Group 23)의 신규가입문제를 토의하고 이들이 동회의의 합의사항에

북한이 항로개방을 선언('94.12)한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은 남북한과 협의하여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국제민간항공기 항로 개설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ICAO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일본, 중국 등 4개국 항공실무자 대표회의(9.10~13, 태국)는 남북한 협력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同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자국영공의 무차별 개방원칙과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며, 대구-평양관제소간 항공관제(관제직통 통신망구성) 협상을 위한 제2차 후속회의를 개최(11.27)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관계의 경색으로 한국은 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잠수함사건의 후유증은 남북한이 참여하는 또 다른 국제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2월 초 TRADP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해운산업의 전자자료교환(EDI)에 관한 실무회의가 1997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유엔에서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로 인해 대립 국면을 보였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무장군인을 비무장지대에 투입한 사건에 대해 유엔안보리 의장의 대언론 구두성명이 발표(4.11)되었으며, 잠수함사건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

대해 개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였다.

정유지 및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10.15)되었다.¹⁶⁾ 또한 유엔총회(10.29)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한 가운데 찬성 142표, 기권 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1997년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금년의 긴장과 대립을 어느 정도 벗어나 TRADP의 일환으로 예정되었던 EDI 실무회의, ICAO와 남북한 관제협상 등 실리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무자급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1997년 남북한 관계는 상반기에는 잠수함사건의 해결여부, 하반기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북·미관계의 전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잠수함사건이 해결되면 남북 접촉과 경제교류·협력이 재개될 것이나, 그 수준 및 형태에는 북한의 「4자회담」 호응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16) UN안보리 의장성명은 안보리에서 정전협정 준수를 최초로 언급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침입과 이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同 성명은 잠수함의 '침입'(infiltration 또는 incursion)이라는 표현 대신 '사건'(incid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잠수함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 준수를 원론적으로 강조했을 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대남침입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들이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도록 권장했을 뿐 북한의 책임규명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수로사업, TRADP,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1996년 하반기의 경색과 대립국면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는 당국간 직접 대화는 여전히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부문에서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좀 더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附 錄

#부록

1996년도 主要事件日誌

- 1. 1 북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정치사상·군사·경제
3대진지 강화 촉구
- 1. 5 KEDO, 경수로사업 관련 사업전용역계약 한전과 체결
- 1. 5 무라야마 일본 총리, 전격사임
- 1. 9 북한, 김정일을 ‘붉은기 철학’의 창시자로 호칭
- 1.10 북·미, 하와이에서 유해송환 협상
- 1.14 경수로부지 지질조사장비 부산항에서 나진항으로 출발
- 1.16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현승일 부부 한국
으로 망명
- 1.16 북한, 사로청 창립 50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 1.17 북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
년동맹」으로 개칭
- 1.23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7개 한국 기업에 나진·
선봉 국제투자 설명회 초청장 발송
- 1.24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대북 쌀지원에 관한 신축적
대응입장 표명
- 1.31 미국, 북한에 대해 2백만불의 추가식량지원을 결정

- 2. 4 북한, 미국측에 테러행위 중지 서한 전달
- 2. 6 미국, EU의 KEDO 참여 추진
- 2. 6 중국,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
- 2.15 북한 무장청년, 평양주재 러시아무역대표부 난입
- 2.20 김정일,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 ‘장군님 따라 붉은기 지키기’ 관람
- 2.20 김정일, 제963군부대 여성중대 방문
- 2.22 북한, 미국에 평화협정의 전단계로서 잠정협정 제의, 이를 협의하기 위한 “북미 공동군사기구” 제안
- 2.24 북한, 미국에 애틀란타 올림픽 참가경비 부담 요청
- 2.27 북한, 국제적십자사연맹에 현물보다 현금지원 요청
- 2.28 경수로기획단, 경수로부지를 함남 신포로 확정
- 3. 2 한·일 정상회담 개최
- 3. 5 정부, 북한 ‘염분진호’ 생존선원 및 시신 판문점 경유 송환
- 3. 6 갈리 유엔사무총장, 방북계획 무산
- 3. 7 미국무부, 북한 주민들이 50개 성분으로 분류·통제되고 있다고 밝힘
- 3.14 (주)대우,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 합영사업 합의
- 3.16 스펜서 리처드슨 평양주재 미연락사무소장 내정자, 북한 입국

- 3.16 국제인권협회, 유엔인권위에 북한인권 특별보좌관 임명 요청
- 3.17 중국, 전인대 8기 4차 전체회의 폐막
- 3.18 52차 유엔인권위 연례회의, 제네바 개최
- 3.19 IAEA,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 봉인에 동의했다고 발표
- 3.20 KEDO, 한전을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
- 3.21 미의회,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국의 군사개입 촉구 결의안 채택
- 3.23 대만 총통선거 실시
- 3.26 KEDO, 사무총장 일행 방북
- 3.27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실무그룹회의, 선봉 개최
- 3.29 북한, 북경 쌀회담 재개 제의
- 4.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 남북회담 거부방침 표명
- 4. 3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 평양에서 김정일 면담
- 4. 4 북한,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관련 임무 포기 담화 발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진입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지부착 중지 선언
- 4. 5 북한군, 비무장지대 진입
- 4. 6 북한, 북경에서 제4차 남북접촉 제의

- 4. 9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4. 9 (주)대우 북경지사장, 평양 도착
- 4.10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평양 방문
- 4.11 유엔안보리, 북한 무장군인 비무장지대 투입 관련 대언론 구두성명 발표
- 4.11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북·러관계 확대 촉구 메시지를 강성산총리에게 발송
- 4.11 이성대 북한 대외경제위원장, 쌀구입문제 논의차 태국 방문
- 4.12 북·러, 「경제·과학기술 협력의정서」 조인
- 4.13 진로그룹 부회장 일행, 평양 방문 후 귀국
- 4.16 한·미 정상회담, 북한에 4자회담 체의
- 4.17 미·일 정상회담,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발표
- 4.19 일·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개최
- 4.19 북한 외교부, 4자회담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힘
- 4.20 북·미, 제1차 베를린 미사일회담 개최
- 4.21 미·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개최
- 4.25 중·러 정상회담,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4.28 KEDO 5차 경수로부지 조사단, 평양 도착

- 5. 7 북한, 4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국에 요구
- 5. 9 북·미, 제2차 유해송환협상 타결
- 5.11 북한, 처음으로 남한의 민간단체에 쌀지원을 공식 요청
- 5.13 한·미·일 제2차 고위정책협의회, 4자회담에 대한 3자공동 설명회를 북한에 제안
- 5.16 이성록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일본에 쌀 지원 요청
- 5.19 미국,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미군유해 보상금 2백만 달러 전달
- 5.20 미국, 중국에 최혜국 대우 연장 결정
- 5.24 북한, 3자공동설명회 거부 논평 발표
- 5.25 클린턴 미대통령, KEDO에 2천2백만 달러 제공 승인
- 5.26 빌 리처드슨 미하원의원, 방북
- 5.31 탈북자 정갑렬 및 장해성, 서울 도착
- 6. 1 대만, 북한의 쌀 10만톤 지원 요청 공개
- 6. 6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최우진 북한 외교부 부부장 면담
- 6. 8 중국, 핵실험 실시
- 6.10 김정일, 금강산 발전소 건설현장 시찰
- 6.11 정부, 유엔을 통한 3백만 달러 대북 지원 방침 발표
- 6.17 남북한, 제네바 군축회의 동시 가입
- 6.24 김정일, 영원수력발전소 건설현장 시찰
- 6.25 북한·마카오, 9월부터 정기항공 노선 개설 합의

- 6.26 북한외교부, 주한 유엔군사령부 실태 관련 비망록 발표
- 6.26 김정일, 김일성 사망 2주년 중앙추모대회 참석
- 6.30 북한,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에 한국경제인 초청 계획 발표
- 7. 1 권오기 부총리, 대북 지원식량 일부 군량미 전용 발표
- 7. 1 정부, 세계식량계획에 대북 수재지원금 200만 달러 송금
- 7. 4 러시아, 엘친 대통령 재선
- 7. 6 KEDO, 제6차 부지조사단 평양 도착
- 7. 8 평양방송, “우리는 김일성민족이다”라는 정론 발표
- 7.11 KEDO·북한, 영사보호·통신·통행부문 3개 후속의정서 서명
- 7.12 (주)대우, 합작사인 민족산업총회사에 512만 달러 투자 자금 송금
- 7.15 한전, KEDO에 경수로사업 개략사업비 산정·제출
- 7.20 북한, 유엔아시아농업기구 아시아지역회의 의장국 피선
- 7.26 북한 판문점 대표부, 북·미장성급 회담 개최 제의
- 7.29 중국, 핵실험 중단 표명
- 7.29 정부, 조난 북한군 병사 판문점 경유 송환
- 8. 1 북한, 청년동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 개최
- 8. 2 북한, 12월부터 한국항공사를 포함한 각국 항공사에 영공 개방 의사 표명

- 8. 5 북한, 중국을 통해 불법입북한 소설가 김영 조사 보도
- 8. 6 카터, 김형우·주유엔 북한대사와 대북 농업기술 지원 논의
- 8. 7 북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요청
- 8. 7 한총련 대표 2인, 입북
- 8. 8 중국,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동의
- 8.10 북한적십자사, 서해상에서 발견된 한국인 시신 1구 인도
- 8.12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촉구
- 8.14 북한, 판문각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 개최
- 8.14 북한, 불법입북 소설가 김영 중국으로 추방
- 8.14 미·러 해군, 합동군사훈련 실시
- 8.15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4자회담 수용시 대북 식량지원, 남북교역 확대, 한국관광객 방북 허용 등 표명
- 8.21 토니 홀 미하원 일행, 방북
- 8.30 정부, 유엔아동기금에 대북 수재지원용 100만 달러 상당 분유 전달
- 8.30 북한,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 송환 요구
- 8.30 북한, (주)대우 직원 북한상주 허용
- 9. 2 북한,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 치료 목적 의료진 및 두 딸 파견 제의
- 9. 3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부산 방문

- 9. 8 한국,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 불참 결정
- 9. 8 북한, 공화국 창건 48주년 기념 경축보고대회 개최
- 9.10 국방부, 러시아의 국내 무기시장 참여 허용 표명
- 9.10 남북한, 동북아 항공실무자회담 참가
- 9.10 북한, “조·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폐기에 따라 러시아와 새로운 우호조약 체결의사 표명
- 9.13 북한,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 개막
- 9.16 정부, 납북된 안승운 목사 원상회복 중국에 요청
- 9.17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연맹에 대북 수재지원용 14억 4천만원 상당 구호물품 전달
- 9.18 북한잠수함, 강릉 침투
- 9.18 미국, 사용후 연료봉 관련 제6차 북·미전문가 협상 참여 차 방북
- 9.23 북한, 잠수함이 훈련중 기관고장으로 좌초됐다고 잠수함 및 승무원 송환 요구
- 9.28 KEDO·북한, 경수로사업 관련 북한근로자 임금 합의
- 9.30 KEDO·북한, 경수로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협상 타결
- 10. 1 러시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 무기판매 지속 표명
- 10. 1 최덕근 블라디보스톡 주재 한국영사, 피살

- 10. 6 북한, 불법입북 미국인 현자이크 체포 발표
- 10.11 조총련, “애국미” 1만톤 북한 전달
- 10.13 북한병사 광경일, 귀순
- 10.15 유엔안보리, 잠수함사건 관련 의장성명 채택
- 10.15 김정일, 구월산유원지 건설현장 시찰
- 10.17 KEDO, EU 참여시 경수로건설 참여 가능 발표
- 10.20 일본, 총선 실시
- 10.21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사건 관련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 10.28 탈북자 허창걸 모녀, 귀순
- 10.29 유엔총회,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 10.29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노동1호 실험계획 중단 요구
- 10.29 KEDO, 경수로사업 관련 기술자문용역사로 미 듀크사와 계약 체결
- 10.31 한·미, 연례군사위원회 워싱턴 개최
- 11. 1 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피선
- 11. 1 한·미,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워싱턴 개최
- 11. 1 김정일, 차광수비행군관학교 시찰

- 11. 5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재선
- 11. 7 북한, KEDO 활동 장기간 정지시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 중단 시사
- 11. 9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사건 관련 북한의 사과요구 불응시
경수로건설 유보방침 표명
- 11.18 북한,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잠수함사건 관련 유감표명
용의 시사
- 11.18 미국, 동북아 7개국 국방장관회의 내년 개최 제의
- 11.19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중국 방문
- 11.19 북한, 20일부터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 폐쇄 발표
- 11.19 북한,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에서 잠수함사건 관련 시신
송환 주장
- 11.24 APEC, 마닐라 정상회담 개최(한·미, 한·일, 한·중 정상
회담)
- 11.24 김정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방문
- 11.26 북한병사 정광선, 판문점 경유 송환
- 11.26 주한미군·북한, 판문점 비서장급 회담
- 11.26 국회, OECD 가입 비준 동의안 의결
- 11.28 북한, 미국인 현지커 석방

- 12. 3 미국, 일본전범 입국 금지
- 12. 5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및 코언 국방장관 임명
- 12. 5 지호전 중국 국방장관, 미국 방문
- 12. 9 북·미, 이형철 외교부 미주국장과 마크 민턴 국무부 한국
과장간 뉴욕 실무회담 개최
- 12. 9 탈북 김경호 일가 17명, 서울 도착
- 12.17 국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연구보고서>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 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통일정세분석>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세계주요사건일지>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연례 정세 보고서>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논 총〉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자 료>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6~1997

年例情勢報告書 9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4725, FAX: 238-329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